saesayon.org Report Collection

테마북 Thema Book

thema 2009.9

한국경제의 고속회복, 어떻게 읽을 것인가

외환위기가 불러온 한국 사회의 근본 변화

이러한 상황이 6월 항쟁과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국민들이 단들고자 했던 상황일까? 이에 대답하기 전에 우리는, 1987년 이후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의 최대 국난이었으며 국민의 생활양식과 삶의 구조를 통째로 뒤바꿔버린 외환위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 외환위기는 2001년 부채상환으로 IMF 졸업을 선언했다고 해서, 현재 외환 보유고가 26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해서 종료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외환위기는 단지 '외환지불 능력'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 변화, 즉 87년 체제와 전혀 다른 '97년 체제'를 심어놓았다. 이제 87년 체제의 특성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서 부차적이고 비본질적인 영향력만 남아 있다.

1987년 이후 문민정부에서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확실히 정치권력의 특권의 성격은 완화되었다. 그렇다고 그 만큼의 권력이 국민에게 돌아간 것도 아니었다. 1997년 외환위기는 정치가 내놓은 권력의 대부분을 시장으로, 외국 금융자본과 재벌 대기업이 상징하는 경제권력으로 집중시켰고 87년 체제를 통해서 만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고 이러한 자본운동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국민들 중 소수만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고 대부분은 비정규직으로, 임시직으로 밀려났다. 이를 양극화 현상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도 이미 오랜 일이다.

이러한 상황이 6월 항쟁과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국민들이 단들고자 했던 상황일까? 이에 대답하기 전에 우리는, 1987년 이후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의 최대 국난이었으며 국민의 생활양식과 삶의 구조를 통째로 뒤바꿔버린 외환위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 외환위기는 2001년 부채상환으로 IMF 졸업을 선언했다고 해서, 현재 외환 보유고가 26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해서 종료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외환위기는 단지 '외환지불 능력'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 변화, 즉 87년 체제와 전혀 다른 '97년 체제'를 심어놓았다. 이제 87년 체제의 특성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서 부차적이고 비본질적인 영향력만 남아 있다.

1987년 이후 문민정부에서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확실히 정치권력의 특권의 성격은 완화되었다. 그렇다고 그 만큼의 권력이 국민에게 돌아간 것도 아니었다. 1997년 외환위기는 정치가 내놓은 권력의 대부분을 시장으로, 외국 금융자본과 재벌 대기업이 상징하는 경제권력으로 집중시켰고 87년 체제를 통해서 만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고 이러한 자본운동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국민들 중 소수만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고 대부분은 비정규직으로, 임시직으로 밀려났다. 이를 양극화 현상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도 이미 오랜 일이다.

[테마북⑫] 한국경제의 고속회복, 어떻게 읽을 것인가

발행 | 2009년 9월

지은이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펴낸이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주소 | 서울 마포구 서교동 461-28 삭녕빌딩 2층(우 121-840)
전화 | (02) 322-4692
팩스 | (02) 322-4693
인터넷 사이트 | http://saesayon.org
이메일 | media@saesayon.org

책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테마북⑫] 한국경제의 고속회복,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전체 목차

◆ 정부가 만들어낸 한국의 경제회복 지표들.....7
_국가는 역시 위대했다?
_세제감면을 동원한 정부의 자동차 소비지원의 힘
_설비투자도 건설경기 회복도 정부가 주도하다.
_고용지표에도 정부의 흔적은 막대했다.
_국가가 바꾼 것과 바꾸지 못한 것
_세계경제 구조 변동에 대처해야 할 국가자본주의

◆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한국 대기업의 힘과 한계.....17
_한국경제 회복의 3대 주역, 정부-글로벌 대기업-외국 금융자본
_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꿈꾸는 한국의 초 대기업들
_외환위기 학습 경험으로 무장한 한국의 초 대기업들
_위기가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인가
_한국의 삼성이 잘나가면 한국 국민도 잘 나가는가
_글로벌 기업으로 접근할수록 국민경제와는 멀어진다

◆ 2009년 주식시장 재반등의 주역 외국자본.....30
_안개 속의 경기전망, 그러나 알고 있는 세 가지
_금융위기 사실을 잊어버린 '여의도 증권가'와 '강남 부동산 업계'
_수퍼추경의 1.5배, 50조 원으로 한국 자본시장을 되살린 외국인
_한국 주식시장의 외국인은 역시 월가의 사람들
_한국의 글로벌 대자본, 증시에서도 주가를 높이다.
_그러나 금융은 아직 살아있다.

◆ 금융위기의 교훈과 과제.....45
_미국 9.7퍼센트 실업률의 의미
_금융위기를 초래한 99년 이후의 규제완화 조치들
_2004년 신바젤협약 체제와 금융환경의 변화
_금융위기의 교훈과 과제

◆ 한국노동시장 2차 구조변동의 4대 징후.....55
_8월 고용동향 특징과 고용시장 구조 변동 가능성
_미국식 금융시스템, 복지시스템, 그리고 고용시스템의 파산
_상시 구조조정으로 유지된 상용직, 대기업의 고용흡수력은 없었다.
_취약계층에 집중된 고용타격, 완충지대가 없다.
_경기회복의 주력 제조업, 고용회복의 주력은 아니었다.
_'실질적 고실업 국가'로 변화하는가.
_'고실업 상시화'의 징후가 고용보험에 줄 충격.
_실질적 고실업 국가 전환 막기 위해 '노동 유연화'의 폐기가 절실

[새사연 테마북 12권 발간에 부쳐]

수확의 계절 맞은 한국경제, 누구를 위한 '풍년'인가

1년도 안 돼 국민들의 관심사가 정말 극적으로 바뀌었다. 2009년 2월까지만 해도 1929년 대공황보다 어쩌면 더 큰 세계 경제의 추락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그렇다. 당시 경제 위기를 둘러싼 의견차가 있었다면 단지 위기의 깊이와 시간에 대한 '사소한' 차이일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관심사 자체가 바뀌고 있다. 세계 경제가 곧 회복된다는 사실이 부정할 수 없는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4년 동안의 임기를 다시 보장받은 벤 버냉키 미국 연준 의장은 지난 9월 15일, "적어도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시점에서 경기침체가 끝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선언했는데, 이 주장으로 이제 "위기 가속화냐, 회복 시작이냐"는 논쟁은 사실상 종결된 것처럼 보인다. 서브프라임 발 금융위기를 예견했던 루비니 교수가 "앞으로 적어도 1000개 이상의 미국 은행들이 파산하면서 월가가 쓰러질 것"이라거나, 스티글리츠가 위기 속에 살아남아 더욱 비대해진 금융회사의 지배력 때문에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개탄했던 것도 현재의 경기회복을 부인하는 발언은 아니었다.

이제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이냐, 회복 효과가 일반 국민들에게도 전달될 것이냐"로 쟁점이 옮겨가고 있는 형국이다. 그리고 그 정점에 한국 경제가 서 있다. 2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2.6퍼센트를 기록한 한국은 다른 OECD 국가들이 여전히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미국 -1.0%, 영국 -0.8%) 1%에 채 못 미치는 미미한 수준의 반등(일본 0.9%)에 그친 가운데 가히 경이로운 회복속도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지수도 1700선을 돌파(9.17 장중)했고, 삼성전자 주가는 사상 최초로 80만 원 선을 넘어섰다.

무엇이 이처럼 세계 경제의 대추락을 대반전으로 이끌었는가. 한국 경제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국가의 강력한 경제 개입과 경기 부양,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한 한국의 유력 초(超) 대기업들의 선방 그리고 파산의 위기에서 한숨 돌린 월가 금융자본의 한국 주식시장 귀환이라는 3대 요인이 있었다.

정부는 막대한 유동성 공급과 부실 금융회사 지원으로 금융위기를 지연시키면서 동시에 대대적으로 경기부양 자금을 풀어 공공부문에서의 투자, 소비, 고용 회복을 이끌었다. 대기업은 경제 위기 속에서 기존 경쟁자들이 고전하고 있을 때 유리한 환율효과를 배경 삼아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높이면서 산업생산을 끌어올리고 수출 추락을 방어했다. 한국 정부와 대기업의 눈부신(?) 활약으로 한국 경제 안정세가 보이자 썰물처럼 한국시장을 빠져나갔던 월가의 금융자본이 다시 대대적으로 한국 주식을 사들이면서 주가도 폭등했다.

규제완화와 감세를 추진하며 위험을 자초했던 정부, 내수와 고용을 무시한 대기업의 수출지향 정책, 환율과 주가를 뒤흔들며 경기 추락을 주도했던 월가의 자본들 바로 그 당사자들이 다시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 한국 경제의 지표들을 살려내고서는 경기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때 지지율 20퍼센트로 심각한 정권위기에 빠졌던 이명박정부도 경기회복과 함께 되살아나고 있으며 이제는 '중도실용-서민정책'을 편다며 여유마저 보이고 있다.

그러면 정부와 대기업, 월가 자본들이 스스로 우리 국민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다시 우리 경제지표를 끌어올리는 곡예를 하는 동안, 대다수 우리 국민의 형편은 어떻게 변했을까. 경기 회복 소식은 분명 국민들이 기다려 마지않던 반갑고 고마운 소식이다. 그렇다면 앞날의 생계를 장담할 수 없어 불안한 나날을 보내던 우리 국민들도 이제 한숨 돌릴 때가 되었을까.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다.

그들이 경기를 위험에 빠뜨리고, 다시 그들이 경기를 호전시키면서 '그들만의 극적인 스릴'을 느끼는 동안 국민 다수의 생활은 여전히 한 단계 한 단계 악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한번 악화된 상황은 성장률 지표처럼 쉽게 반전되거나 회복되지 않고 있다. 희망근로를 뺀 고용지표는 여전히 마이너스 추락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가계소득도 여전히 줄어들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초 저금리 상황에서도 대출 증가로 인한 이자부담은 늘어만 가고 있다.

오히려 경제 위기로 소득양극화는 더욱 구조화 되고 있으며 상시적 고용 불안은 아예 상시적 고실업 국면이라는 초유의 고용상황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다. 내수기반 강화 대신 일부 대기업들의 수출 실적에 우리 경제가 더 많은 명줄을 걸게 되었다. 가뜩이나 큰 건설 비중은 더 커지고 사회복지나 사회서비스 부문의 수준은 여전히 바닥이다.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더더욱 알 길 없는 외국자본의 동향만을 쳐다보며 가슴 졸이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제 각종 경기 지표들은 수년간에 걸쳐 위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구조와 국민의 생활은 결코 위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마치 10년 전 외환위기가 외형적으로는 극복되었지만 우리 국민의 생활은 엄청난 변화를 거치며 외환위기 이전과는 결코 같아질 수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이번 테마북은 '위기인가, 아닌가'라는 논쟁을 넘어 '회복으로 반전된 한국경제'로 의제를 이동시키면서 회복의 실체, 회복의 주역은 누구이며, 경제회복이 국민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키기고 있는지를 짚어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나아가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위기가 우리 경제에 남긴 깊은 상흔이 향후 국민경제에 어떤 지각변동을 초래할지에 대해 새사연이 본격적인 탐구를 시작할 것임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다.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정부가 만들어낸 한국의 경제회복 지표들

2009.9.2 | 김병권_새사연 부원장 | bkkim21kr@saesayon.org

목 차

1. 국가는 역시 위대했다?
2. 세제감면을 동원한 정부의 자동차 소비지원의 힘
3. 설비투자도 건설경기 회복도 정부가 주도하다.
4. 고용지표에도 정부의 흔적은 막대했다.
5. 국가가 바꾼 것과 바꾸지 못한 것
6. 세계경제 구조 변동에 대처해야 할 국가자본주의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http://saesayon.org

1. 국가는 역시 위대했다?

1929년 대공황을 능가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던 세계경제의 붕괴조짐이 멈추고 미약하지만 회복세를 시작했다. 그 동안 국가의 시장개입을 극히 꺼려왔던 금융자본이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하자 앞 다투어 국가재정과 중앙은행을 끌어들였던 것이 경기회복의 가장 큰 배경이 되었다.

2007년에만 해도 G20 가운데 5개 나라가 재정 흑자를 유지했지만 2009년에는 모든 국가가 재정적자로 돌아설 만큼, 전 세계가 예외 없이 자국경제의 자유낙하를 막고자 나섰고, 5위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가 파산했던 1년 뒤인 2009년 3월을 저점으로 세계경제 추락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경제운용에 대한 국가의 막강한 역할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향해 점입가경 국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던 2008년 8월,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는 신자유주의 시장실패를 대신해서 국가가 경제 무대에 복귀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을 보며 일찍이 '국가의 귀환'을 예고했다(John Plender, "The return of the state", 2008.8.21). 한국에서도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앞장서 설파해 왔던 삼성경제연구소가 시장주의는 퇴조하고 '국가자본주의'가 대두되고 있다고 고백한 바가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9년 해외 10대 트렌드", 200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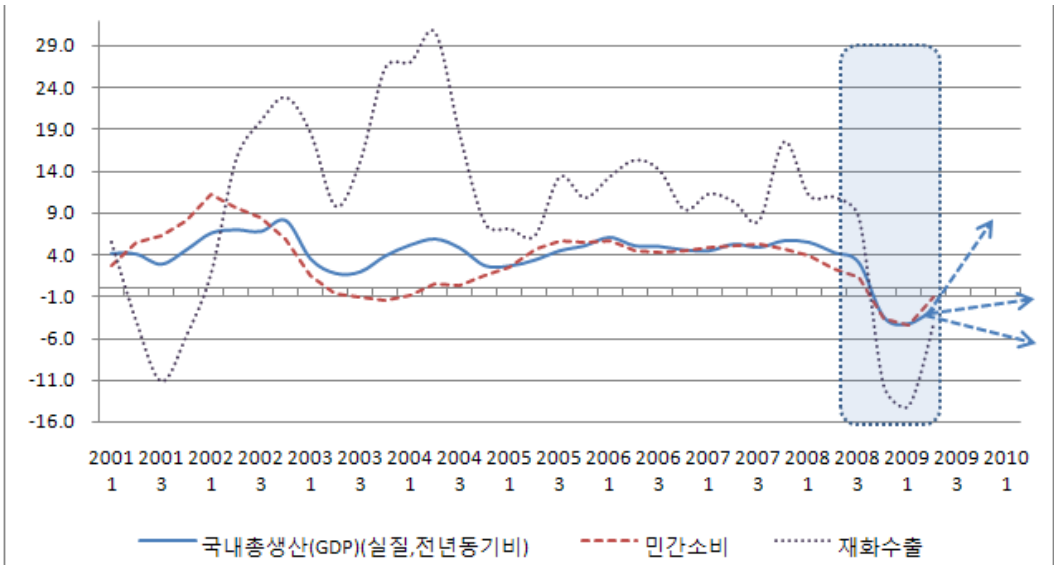
특히 OECD 국가 가운데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한국에서 국가의 역할이 경제회복을 이끄는데 지대했다는 평가가 최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 보고에 의하면, G20의 상위 10개 국가 가운데 호주와 한국이 정부의 재정투입 효과가 가장 탁월했다는 분석도 있을 정도다(<매일경제> 2009.9.1).

실제로 한국경제는 2009년 1분기에 전분기 대비 0.1퍼센트 성장했고, 2분기에는 다시 2.3퍼센트나 올라,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유럽 나라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 요인이 ▶ 환율 효과를 업은 수출대기업의 호조, ▶ 외국인 자금유입과 자산시장 호조, ▶ 꺾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가계 부채의 확대와 함께 ▶ '정부의 조기 재정집행'에 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경제회복에서 국가의 역할이 지대했다는 사실은, 역으로 기업과 가계 등 민간 부분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의 개입이 지속되지 않는 한 경기회복 역시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위해 국가의 경기부양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이와 대조적으로 정부부문을 뺀 민간 부문의 상황은 어떤지를

몇 가지 정부 통계 수치를 활용하여 짚어 보도록 하자.

그림1. 실질 경제성장률 지표 추이(전년동기대비)



2. 세제감면을 동원한 정부의 자동차 소비지원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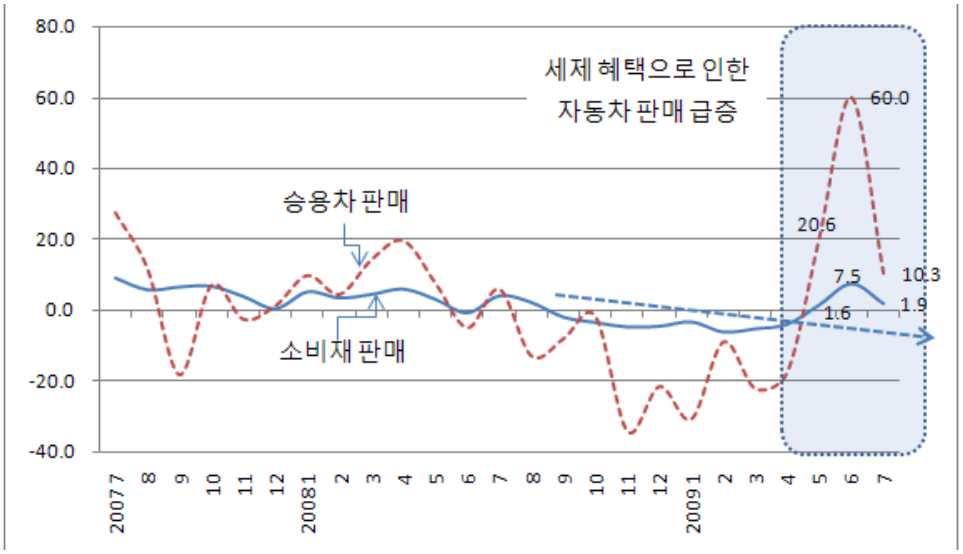
우선 세계 소비수요 위축으로 인한 수출 부진 속에서 경제회복의 관건이었던 민간 소비 부문을 살펴보자. 통계청이 지난 8월 31일 발표한 <2009년 7월 산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재 판매는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8년 9월부터 마이너스로 빠지기 시작하여 2009년 2월에는 -6.1퍼센트까지 떨어졌다. 이런 추락에 큰 영향을 준 것은 -30퍼센트 이상으로 판매가 감소했던 자동차 판매 때문이었다.

그런데 소비재 판매가 2009년 5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섰고 6월에는 무려 +7.5퍼센트까지 증가한다. 경기회복의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도 주요 원인은 자동차 판매였다. -20퍼센트 이상 감소세를 보이던 국내 자동차 판매가 5월에는 +20퍼센트, 그리고 6월에는 +60퍼센트로 폭증하면서 소비재 판매를 회복시켜낸 것이다. 정부조차 깜짝 놀란 2분기 성장률 2.3퍼센트 가운데 0.5퍼센트~0.8퍼센트는 '자동차 내수 폭발'때문이었다. 전체 성장률의 1/5~1/3을 자동차판매가 담당해준 셈이다(<연합뉴스> 2009.7.10).

추락행진을 하던 자동차 판매가 기록적 상승세로 급반전하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게 된 이유는 뭔가. 간단하다. "2008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정부가 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30퍼센트 감면해준데 이어서, 2009년 5월부터는 노후차를 팔거나 폐차하고 신차를 살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를 70퍼센트 인하해 주

는 정부 지원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2. 소비재 판매지수 증가율(전년동월대비)



내수판매 급증과는 대조적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수출 감소로 고전하고 있는 일본보다는 낫지만, 한국의 수출 역시 2008년 11월, -19.5퍼센트 추락을 시작으로 2009년 8월 현재 -20.6퍼센트로 줄곧 20퍼센트 감소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최근 수출비중이 무려 28퍼센트까지 커져버린 중국을 포함하여 모든 수출지역에서 예외가 없으며, 수출시장에서 상대적인 호조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 역시 올해 여덟 달 동안 작년 대비 무려 40퍼센트가 감소했다(지식경제부, <2009년 8월 수출입 동향>, 2009.9.1). 최근 한국 자동차의 미국시장 선전과 점유율 급증은 경쟁사들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보여줄지언정 아직 수출 감소세를 상쇄할 정도는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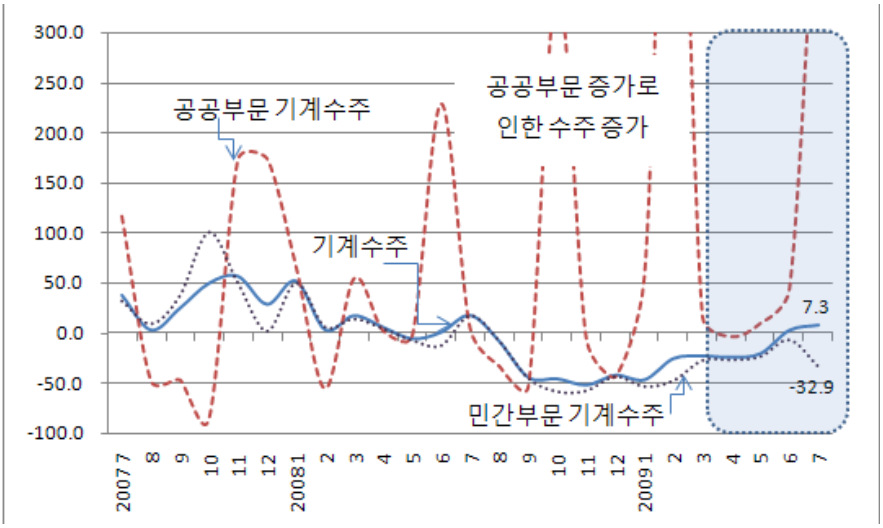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세제 감면이라는 정책수단을 동원한 정부의 역할이 자동차 내수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고, 그것이 전체 내수시장과 경제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수치다.

3. 설비투자도 건설경기 회복도 정부가 주도하다

정부가 경기회복에 기여한 정도는 단순히 세제 감면을 통한 소비촉진에 그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기계수주도 상당 정도 공공부문의 투자 기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설비투자의 핵심 영역으로서 경기회복의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는 기계수주 역시 다른 지표와 마찬가지로 2008년 8월 이후부터 줄곧 -20퍼센트 이상 감소 행진을 이어왔는데, 2009년 6월에는 +2.1퍼센트의 상승세로 돌아서더니 7월에는 무려 +7.3퍼센트로 뛰었다. 그러나 7월 기준으로 놓고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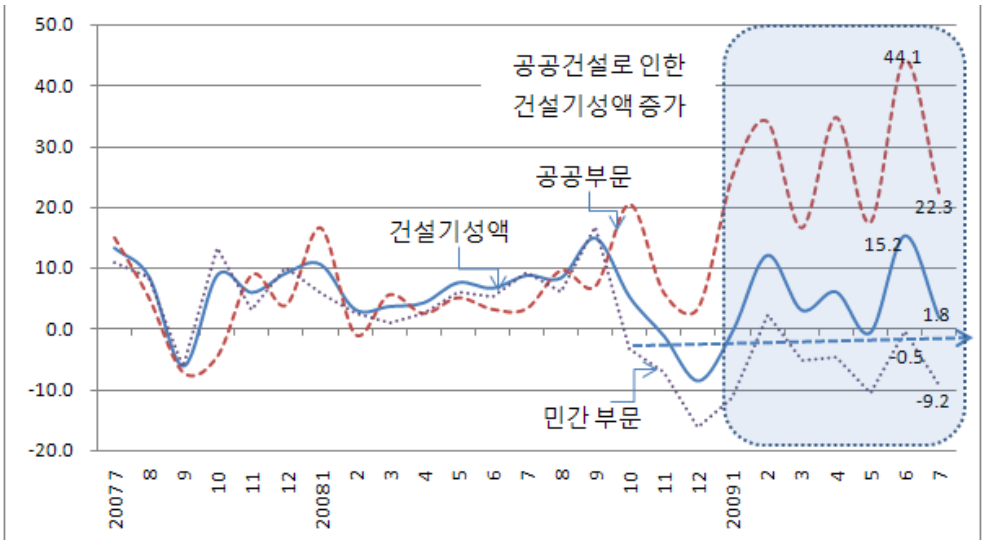
민간 부문에서는 오히려 -32.9퍼센트나 감소했다. 그런데도 전체 기계수주가 상승한 것은 공공부문에서 원자로 등 수주가 늘어 +500퍼센트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그림3. 국내설비투자 증가율 추이(전년동월대비)



정부가 애정을 쏟아 집중하고 있는 토목 건설 분야로 들어가 보자. 예상했던 대로 건설기성액을 기준으로 보면, 실물경기가 급격히 나빠지던 2008년 11, 12월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올해 내내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그림4. 건설부문 기성액 증가율(전년동월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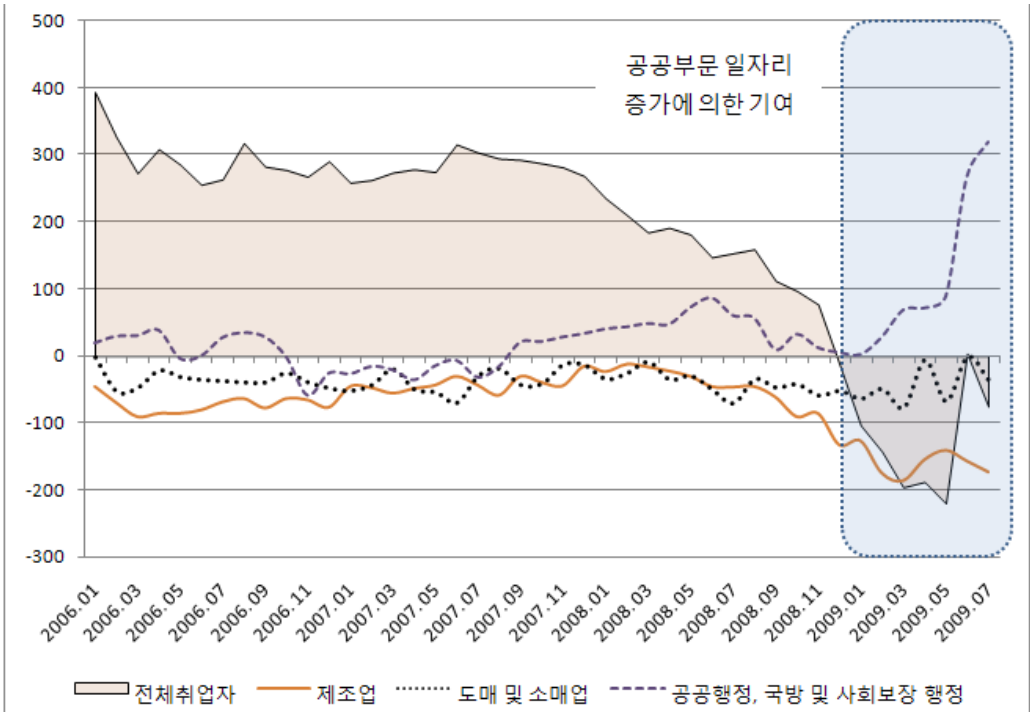
공공부문 건설이 평균 +20퍼센트 이상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민간 부분 건설은 2009년 7월 -9.2퍼센트에 이르기까지 거의 내내 마이너스 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어쨌든 그 결과 건설업은 경기침체를 반전시키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게 되었고,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제조업이 작년에 비해 -7.9퍼센트로 성

장이 감소하는 동안 건설업은 +1.3퍼센트 상승하여 전체 성장률 회복에 도움을 주게 된다.

4. 고용지표에도 정부의 흔적은 막대했다

소비와 산업생산에 이어 고용분야 역시 정부 개입에 의한 영향은 적어도 외형적 수치상으로는 막대하다. 실물경제 침체의 후폭풍으로 대대적인 일자리 감소는 예견된 일이었고, 경기에 후행하는 고용의 특성상 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인다 하더라도 상당기간 고용사정은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예상한 대로 2008년 12월부터 마이너스로 빠지기 시작한 취업자 증가 숫자는 2009년 5월 -22만 명 수준까지 떨어진다. 그러던 것이 2009년 6월에는 +4000명, 그리고 7월에는 조금 추락했지만 -7만 5000명으로 상당한 회복세를 보였다.

그림5.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가 추이(전년 동월대비, 단위 천명)



2009년 1월, +3000명 증가에 불과했던 공공부문의 취업자가 올해 7월에는 무려 100배나 늘어나서 +32만 명 수준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다. 반면 경제위기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에서의 일자리 감소행진은 여전히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제조업은 최근 -15만 명 전후(7월 - 17만 3000명), 건설업은 -12만 명 전후(7월 -12만 7000명), 도소매 음식 숙박업은 -15만 명 전후(7월 -16만 5000명)로 감소폭이 전혀 줄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새사연, <고용 없는 경기회복이 과연 가능한가?>, 2009.8.13).

정부가 단기 임시 일자리로 만들어낸 '청년 인턴'과 '희망근로'의 위력 덕분에 고용 지표가 외형적인 안정세를 찾는 모양으로 전환된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작업(?)'이 없었다면 7월 취업자 증가는 두 달 전인 5월의 -22만 명의 두 배에 해당하는 -40만 명 선으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다.

5. 국가가 바꾼 것과 바꾸지 못한 것

소비, 산업생산, 고용, 그리고 결국은 성장률 지표에 이르기까지 경제의 전 영역에 걸쳐 국가의 역할은 막대했고, 그 결과 예상을 깨고 조기 위기 수습과 함께 '경기회복'과 '출구전략'을 논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여기서 확인해 둘 사실은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으로 성장률도 올리고 고용도 늘리겠다고 했지만 건설부문 고용은 사상 최악이라는 의외(?)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며 '감세'정책을 펴오고 있지만 이로 인한 투자확대 효과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입을 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한국은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60퍼센트가 넘는 161조 원의 재정지출(지출 플러스 순 융자)을 하는 등, 조기에 재정물량 공세를 폈다. 미국이 7870억 달러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지만 실제로 2009년 지출 부분이 1849억 달러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상반기에는 35퍼센트 정도밖에 지출하지 않은 것과 명확히 대비된다. 2분기 성장률 2.3퍼센트(전 분기 대비)라는 놀라운(?) 기록은 그 배경아래 나온 것이며, 정부는 최근 그 여세를 이어 3분기에도 전 분기 대비 당초 예상보다 높은 +1퍼센트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부터의 문제는 정부가 2009년 상반기에 '반전시켜낸' 소비, 산업생산, 고용, 그리고 성장률 지표를 2009년 하반기와 2010년에도 지속시켜낼 수 있는가 하는 것과 또한 몇 가지 경제지표를 개선시켜내는 것이 곧 경제위기 이전으로 한국경제를 되돌려 놓은 것을 의미하는가 하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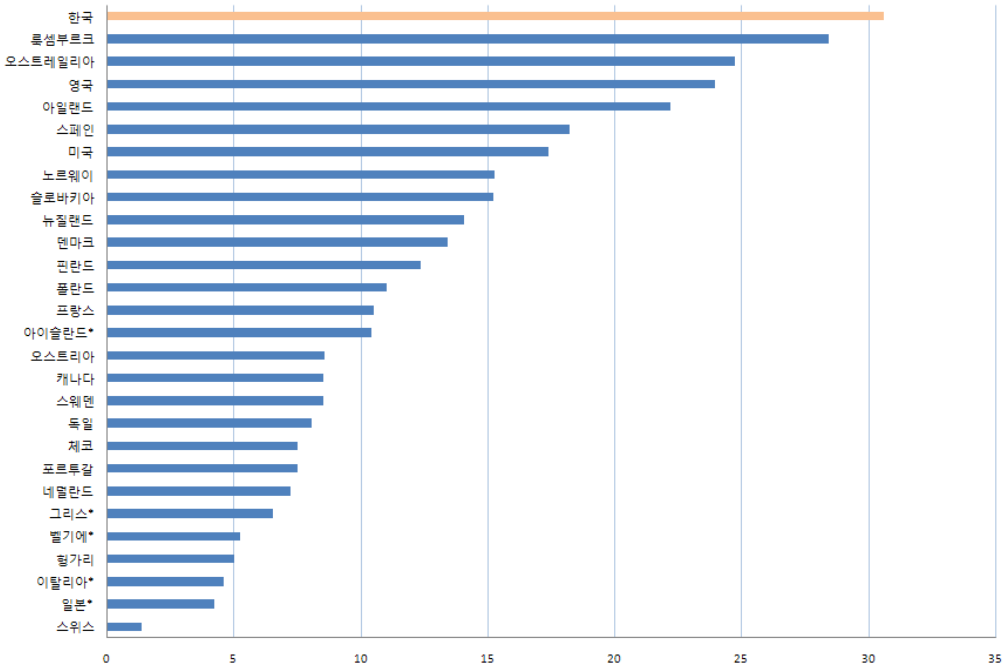
우선 정부의 개입이 상반기 '반짝 효과'로 끝날지 아니면 지속인 추세로 굳혀낼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자. 경기를 회복시킬 정부의 힘은 일차적으로 정부재정에서 나온다. 기금 포함하여 올해 편성한 정부 예산 300조 원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1/3에 육박하는 막대한 규모다. 그러나 정부재정이라고 해서 마르지 않는 샘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조세수입에 의해 절대적 제한을 받는다. 또한 재정지출 확대와 통화 확대는 어느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복병과 맞서게 되어 있다.

2009년 상반기 엄청난 재정물량 공세 덕분에 우리나라는 당초 예상했던 통합재정

수지 적자 22조 원(관리대상수지 적자 51조 원)을 상반기에 이미 초과해 버려서 통합재정수지 28조 원 적자(관리대상수지 적자 42조 원)를 기록했다(기획재정부 발표자료). 그 결과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 증가율이 OECD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국가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6. OECD 회원국 일반정부 부채 평균 증가율 전망(2009~2010)

(전년대비 증가율, %)



*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No 85.

이 때문에 하반기 재정지출 여력은 작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100조 원 남짓이다. 상반기에 '정부가 창조'해낸 '기적'의 경제지표 수치들을 앞으로 더 이상 정부가 떠받들 수 없다는 뜻이다. 이제는 민간이 바통을 이어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가계는 줄어드는 소득을 부채로 메우면서 소비를 유지하는 바람에 오히려 '가계부실'위험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며, 기업들도 여전히 투자나 고용을 늘릴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향후 더블 딥과 같은 불안정한 요소들을 내포하면서 경기회복이 대단히 더디게 진행될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국가의 '단기 신속 대응'도 중요하지만 '중장기 지속 대응' 여부는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정부가 단기적으로 경제지표를 바꾸기 위해 쏟은 비용은 역으로 중장기 지속 대응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로인해 상당부분 민간 부문을 쳐다보는 것 외에 정부가 경제지표를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그 나마의 여지 자체를 더욱 줄이고 있는 것이 바로 '감세와 4대강 사업'인 것이다. 세계에서 먼저 눈부시게 주목을 받던 한국

의 국가자본주의가 가장 먼저 힘을 잃어버릴 수 있다.

6. 세계경제 구조 변동에 대처해야 할 국가자본주의

정부의 '중장기 지속 대응력 약화'와 함께 사실 이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번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위기가 단지 일부 금융자본의 지나친 '탐욕'이나 정책 결정자들의 '실수'에 의해서 빚어진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지난 30년 동안 성장가도를 달리던 신자유주의 '시스템 구조 결함'의 필연적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에 일정한 경제구조전환이 없다면 결코 위기 이전 상태로 복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기득권 세력들의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내부 경제시스템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 조짐들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신자유주의 성장을 주도하던 글로벌 금융자본의 위세를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찰스 프린스 전 씨티그룹 회장도 "30여 년간 일해 왔던 월스트리트는 파괴돼 사라졌다"고 고백한 바 있다(<연합뉴스> 2009.5.19). 미국 정부는 2009년 6월 17일 금융규제개혁 방안(Financial Regulatory Reform)을 발표하면서 제도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다.

미국 중심의 소비성장구조도 쉽게 재 작동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부채 확대형 고소비 구조는 대량의 신용공급을 제공했던 월스트리트와 운명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과 같은 글로벌 경제 불균형 상태와 달러 기축통화체제도 장기 변화의 초입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세계 최대 채권투자회사인 핌코 관계자는 앞으로 세계경제가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 정부규제"라는 새로운 표준(new normal)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한국경제> 2009.8.20). 이전과는 양상이 다른 경제 흐름이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대체로 '성장 가도를 누리던 신자유주의'가 '쇠락해가는 신자유주의'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경기회복 속도'나 '또 다른 위기여부'와 관계없이, 경제구조의 변동이 '신자유주의 틀 안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조짐이 뚜렷한 지금, 향후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는 구조 변동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특히 위기의 진원지였던 '금융시장 개혁'과 아직 누구도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고용시장 개혁'은 정부의 핵심적인 과제의 하나이며, 아울러 구조 변동기의 산업구조 개편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정책 역시 중요하다.

응급조치용으로 부활된 국가자본주의가 지금부터 가장 적실하게 능력을 보여주어야

할 과제는 이처럼 국내외적인 경제 구조변동기에 대처하여 경제제도와 환경,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몇 가지 외형 경제지표를 '창조'하는데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나 전망, 방향은 매우 초라하고 형편없다. 심지어 구조변동 상황에 역진하는 정책을 강행하는 모습조차 발견된다. 금융규제보다는 금융규제완화를 서두르는 모습이나, 지금도 여전히 '노동 유연화'를 고용의 핵심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 사례다. 새로운 산업 정책도 전통적인 '토목 사업'과 별로 다르지 않는데 간판만 바꾼 '녹색사업'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기를 초래한 문제에 대한 구조개혁, 이것은 한국정부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구조개혁을 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 교육과 의료 등 사회서비스를 '신자유주의 방향'으로 민영화하겠다는 정책이 그것이다. 우정민영화라는 신자유주의 카드를 들고 나와 한때 지지도 80퍼센트 이상의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일본 고이즈미 정부가 역설적으로 자민당의 완벽한 몰락을 초래한 사례가 우리나라에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새사연 saesayon.org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한국 대기업의 힘과 한계

2009.9.4 | 김병권_새사연 부원장 | bkkim21kr@saesayon.org

목 차

1. 한국경제 회복의 3대 주역, 정부-글로벌 대기업-외국 금융자본
2.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꿈꾸는 한국의 초 대기업들
3. 외환위기 학습 경험으로 무장한 한국의 초 대기업들
4. 위기가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인가
5. 한국의 삼성이 잘나가면 한국 국민도 잘 나가는가
6. 글로벌 기업으로 접근할수록 국민경제와는 멀어진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http://saesayon.org

1. 한국경제 회복의 3대 주역, 정부-글로벌 대기업-외국 금융자본

하반기 들어 국정운영에 자신감이 붙기 시작한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이 46퍼센트까지 급상승하는 배경을 업고 '개혁총리'로 정운찬 전 국립 서울대 총장을 선임하는 등 거침없는 행보를 하고 있다. 한때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명되던 정운찬 내정자의 변신도 놀랍지만 그를 총리로 과감히(?) 지명한 이명박 대통령도 예사롭지 않다.

때마침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가 9월 2일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한 단계 높이면서 장단을 맞추어주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분명한 것은 최근 대통령의 자신감은 OECD 최고의 경기회복 속도라는 성적표와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자신감의 원천이 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기적적인 조기회복(?)이라는 신화 창조를 이끌고 있는 일등 공신을 꼽으라면 당연히 한국정부와 핵심 대기업, 그리고 외국 금융자본이 3대 주역일 것이다. 우선 정부는 초기에는 위기에 몰린 외환시장 안정과 금융회사 구제에 분주하더니 이내 세제지원과 경기부양자금을 대거 풀어 각종 경제지표를 끌어올리는 등 전방위적인 경제개입을 실시했다. 이미 글로벌 기업 수준에 진입한 핵심 대기업들은 경제위기 속에서 환율 호조건을 등에 업고 쟁쟁한 글로벌 경쟁상대를 따돌리고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이며 산업생산과 수출을 지탱하는 역할을 맡는다.

2009년 3월 이후 금융파국이 소강상태를 보이자, 살아남은 월가의 금융자본은 한국정부와 대기업이 잘 다져놓은 한국경제로 다시 발길을 돌렸고, 코스피 시장에서만 3월~8월까지 무려 22조 원의 자금을 순 유입시키면서 단숨에 주가를 1600선 이상으로 끌어올렸다(한국 거래소 통계자료 잠정치).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은 그동안 뭘 했냐고? 실업과 임금삭감 등으로 물가 상승률을 밑도는 고작 1.4퍼센트의 임금인상(노동부 조사 협약임금인상률 기준, 2009.1~7)을 감수하는 사이 주가는 오르고 부동산이 들썩이고 심지어는 경기마저 회복된다는 소식에 마음만 들떠, 줄어든 소득대신 부채를 더 끌어와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기웃거린 것 말고는 없다. 가계부채 700조, 주택담보대출 340조라는 경제지표 작성에 기여한 것이 사실상 전부라고 해야 할까.

새사연은 이미 한국의 국가가 어떻게 경기회복의 기적을 창조해가고 있는지 '한국에서 부활한 국가자본주의의 힘과 한계'(2009.9.2)라는 보고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삼성과 현대를 필두로 하는 핵심 대기업들은 이명박 정부와 장단을

맞추면서 어떻게 경기회복 국면에 기여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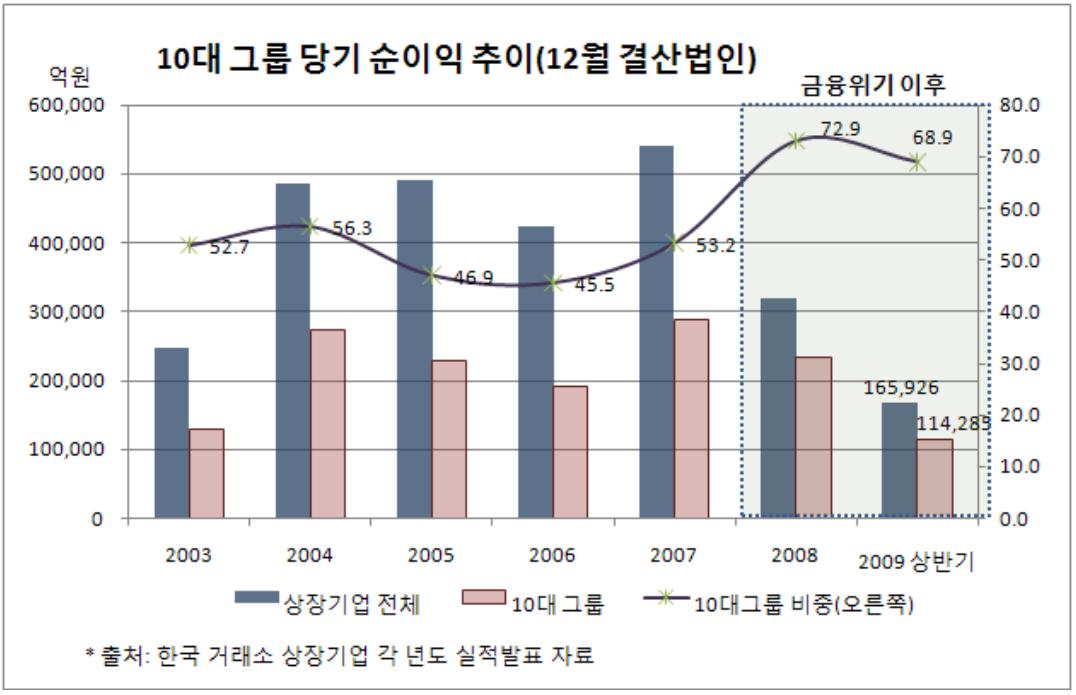
2.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꿈꾸는 한국의 초 대기업들

지난 7월 8일, 포춘지가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 명단에는 삼성전자(40위)와 LG(69위), SK홀딩스(72위), 그리고 현대자동차(87위) 등 4개 회사가 100위권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다. 이들은 더 이상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해서 싸구려 모조품이나 만들고 자기 상표도 못단 채 원가 이하로 수출하는 과거의 기업이 분명 아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60퍼센트, 세계 휴대폰 시장의 30퍼센트를 장악하는 등 반도체, LCD, 자동차, 가전, 휴대폰 등 첨단 제품과 고가 소비재 시장을 자체 기술력으로 확장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 되어 세계를 누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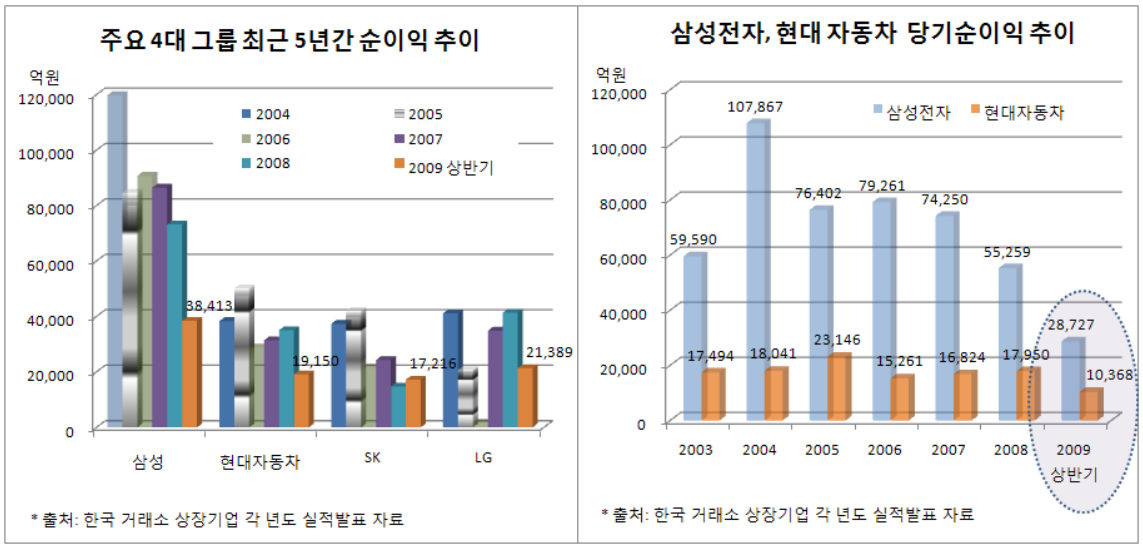
2009년 3월, 극심한 소비위축으로 신음하는 세계시장에서 최초로 LED TV 시장을 창출하여 이미 100만 대 이상을 팔아치우고 연내 200만대 판매를 전망하는 삼성전자, 자동차 선두기업 GM이 생산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인 2차 전지를 납품하기로 한 LG화학, 미국 소비자 조사기관인 JD파워가 신차품질 조사에서 일반 브랜드 부분 1위로 선정한 현대 자동차는 더 이상 글로벌 미국 기업의 하청업체도 아니고 간단히 무시할 수 있는 별 볼일 없는 기업도 아닌 것이다. 하긴 세계 경제규모가 14위나 되는 나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하나도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하지 않겠는가.

이처럼 한국의 초 대기업들은 80년대 후반 3저 호황을 필두로 90년대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생존과 변신을 거듭해왔고 어느덧 글로벌 기업 반열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 초 대기업들의 규모는 우리 국민경제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가. 문제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신자유주의가 선호하는 순이익 기준으로 살펴보자.

우선 외환위기 이후 살아남는 10대 그룹들은 오히려 과거 30대 그룹을 능가하는 규모로 커지면서 한국 기업들의 순이익을 대부분 독차지하게 된다. 한국의 최고 기업들이 몰려 있는 상장기업 전체를 통틀어도 10대 그룹이 차지하는 순이익 비중은 70퍼센트나 된다. 금융위기 이후 비중이 15퍼센트 이상 늘었다. 외환위기 이후 은행들의 순이익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은행들을 빼고 계산하면 훨씬 높게 나온다. 상장기업이 휘청거려도 10대 그룹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제위기 한파의 정점기였던 2009년 상반기에도 10대 그룹은 무려 11조 4000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그러나 10대 그룹 가운데에서도 초 대기업인 4대 그룹으로 좁혀보면 얘기는 또 달라진다. 이들은 2009년 상반기에 최소 9조 6000억 원 이상의 순이익 행진을 계속했고, 물론 10대 그룹 가운데 금호아시아나와 한진그룹의 적자 영향도 컸지만 10대 그룹 전체 순이익의 84퍼센트를 차지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상반기 순이익이 이미 3조에 육박하였고 현대 자동차도 1조 원을 넘어섰다. 삼성전자 1개 기업이 전체 상장기업 순이익의 1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초 대기업의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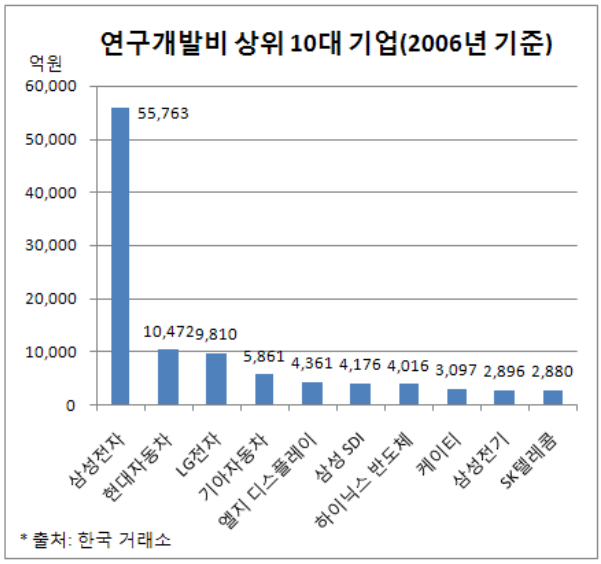
30만 개 중소기업이 도산 위협에 시달리고, 700여 개의 상장기업들도 적자에 허덕이며 위기의 2009년 상반기를 지냈지만, 핵심 4대 그룹은 지난해와 크게 다를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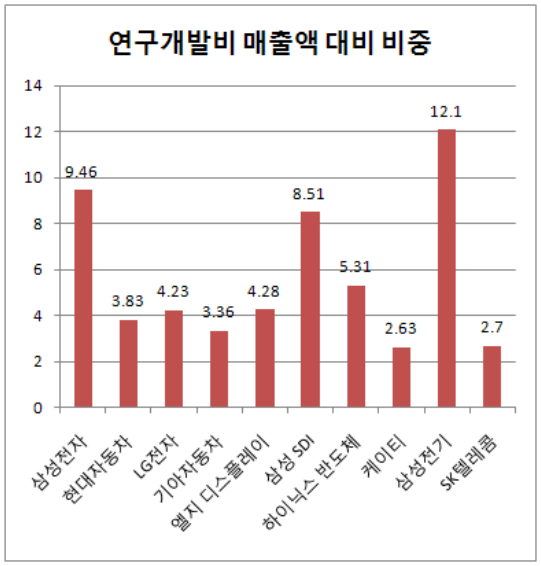
없는 이익행진을 이어왔고, 한국 기업 실적지표를 호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3. 외환위기 학습 경험으로 무장한 한국의 초 대기업들

그렇다면 세계 최고의 금융 그룹인 씨티도 무너지고 부동의 1위를 자랑하던 자동차 기업인 GM도 파산하는 마당에 어떻게 한국의 대기업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흑자행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인가.

물론 한국의 대기업들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했던 학습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다. 500퍼센트가 넘는 부채를 끌어와 중복 과잉투자를 일삼다가 외환위기로 혹독한 시련을 맞고 정부에 의해 강제 빅딜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던 대기업들은 그 이후 부채비율 관리에 지극히 신중해진다. 전반적으로 상장기업의 부채비율은 외환위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아졌지만 최근 다시 높아져 2009년 상반기 기준 102.8퍼센트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삼성은 61퍼센트에 불과하고 현대 자동차도 91퍼센트로 전체 평균을 밑돌고 있다. 10대 그룹이 6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 43조를 감안하면 전혀 경영에 위협이 될 것도 없다. 삼성은 이 와중에도 현금성 자산이 10조를 넘고 있고 현대 자동차도 8조 원을 넘는다(한국거래소, <12월결산법인 2009년 상반기 현금성 자산> 2009.8.21).





그렇다면 이들 초 대기업들은 전혀 투자를 하지 않고 부채비율 관리나 주가관리만 하고 있었던 것인가. 그렇지 않다. 우선 2006년 기준으로 전체 상장기업들의 연구개발비는 14조 5000억 원으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중은 2.3퍼센트 대였다.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는 비중이다. 투자를 기피하고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주주자본주의 경영행태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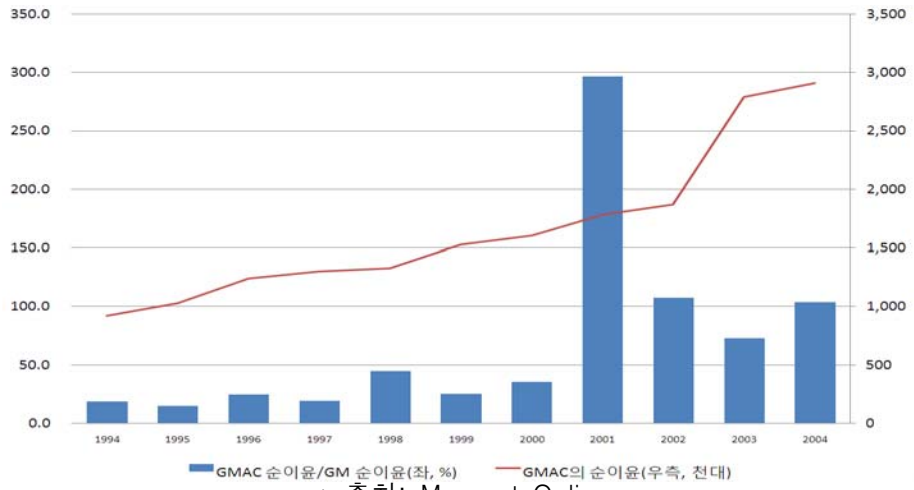
그러나 이 가운데 상위 10개 대기업의 연구개발비는 8조 7000억 원 이상을 차지하여 전체의 60퍼센트였다. 특히 삼성전자 일개 기업의 연구개발비만 5조 5000억 원, 매출액 대비 비중은 9.46퍼센트, 현대자동차는 1조 원, 매출액 대비 비중이 3.83퍼센트, 엘지 전자가 9800억 원, 매출액 대비 4.23퍼센트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삼성전자 한 개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전체 상장기업 연구개발비의 40퍼센트 가까이 된다는 것이다. 2005년에도, 2004년에도 그랬다. 적어도 한국의 초 대기업들은 자체 기술경쟁력을 갖기 위해 이익의 상당부분을 투자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만 보면 대기업들의 최근 경쟁력이 결코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이번 금융위기로 쓰러지는 글로벌 기업들을 보면 한국 대기업들이 얻은 특별한 혜택도 있다. 글로벌 금융화 추세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촌놈' 행세를 했던 것이 오히려 행운을 안겨줬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과 서비스 산업 중심이 아니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가도를 달렸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은 당시의 글로벌 추세에 비추어보면 시대에 뒤쳐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전통적인 제조업 기업이 주력부문의 경쟁력을 키우지 않고 글로벌 추세에 맞추어 금융 수익을 좇다가 파산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GM이다. GM은 90년대 전반기만 해도 GMAC라고 하는 금융회사의 이익이 20퍼센트에 불과했지만, 이후 점점 GMAC 이익에 의존하게 되었고 2000년에 접어들면서는 아예 자동차 부문의 적자를 GMAC의 이익으로 메우는 경영으로 일관하다가 금융위기로 GMAC가 일시에 적자 늪에 빠지자 GM 전체가 파산한 경우다.

그림. GMAC의 순이윤과 GM순이윤에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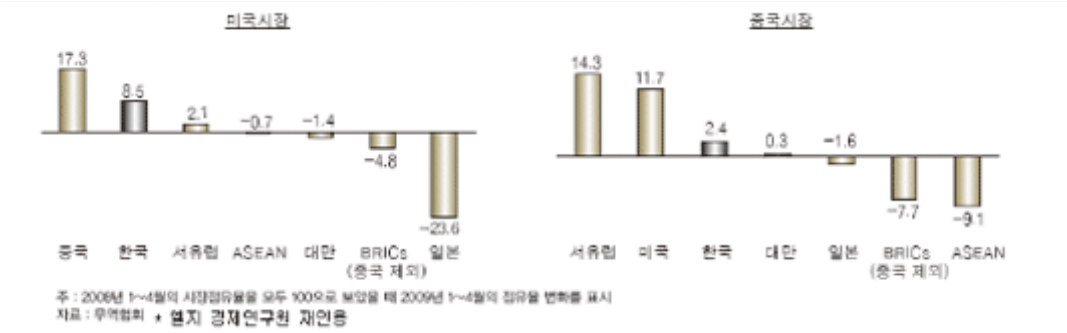


* 출처: Mergent Online

그런데 한국은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인 2009년 2월 자본시장 통합법이 시행되면서 비로소 뒤늦게 이런 길이 열린 것이다. 만약 한국의 자본시장 통합법이 수년 전에 발효되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같은 전통 제조업 기업들이 투자은행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면 사정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미국을 뒤늦게 따라가려다 이익을 보는 경우가 생긴 것이라고 할까.

4. 위기가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인가

그림. 주요국의 미국, 중국시장 점유율 변화(%)



위와 같은 내적 역량을 기반으로 한국의 초 대기업들은 경제위기 속에서 유수의 글로벌 경쟁자들을 제치고 시장 지배력을 높여가고 있다. 미국에서, 중국에서 한국 대기업들이 선전하는 모습이 매일같이 언론보도를 장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년 사이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점유율은 8.5퍼센트나 확대되었고 중국시장에서도 2.4퍼센트가 늘어나 국내 대기업의 선방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일각에서는 이른바 '역(逆)샌드위치론'을 주장하며 한국 기업들이 선진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다고 들떠있는 분위기도 감지된다(엘지경제연구원, <우리나라 수출경쟁력 진단>, 2009.7.1). 원래 샌드위치론이란 2007년 1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중국은 쫓아오고 일본은 앞서가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샌드위치 신세"라고 주장한 뒤, 정체 상태에 놓인 한국 경제를 표현하는 상징 용어가 된 바 있다. 그런데 "2008년 이후에는 여전히 개도국으로부터 시장을 빼앗기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선진국의 몫을 더 많이 잠식하는" 역샌드위치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반전이 순전히 국내 초 대기업들의 내적 역량으로만 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환율 효과가 상당히 큰 영향을 주었다. 이는 우리 주력 제품의 가장 큰 경쟁국가인 일본과의 관계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일본 도요타보다 현대 자동차가 갑자기 기술력이나 마케팅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도요타가 사상 처음으로 적자를 보는 와중에

현대 자동차가 흑자행진을 하는 이유는 다른데 있다.

바로 환율 효과인데, 2009년 1월~4월 기준으로 한국의 원화 가치는 지난해에 비해 약 43퍼센트가 절하되었다. 이에 비해 일본의 엔화는 동일한 기간 동안 8.3퍼센트가 평가 절상되어 그 차이만큼 한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유리하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위축이 극심한 환경에서 일본기업들의 수출 실적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각국 정부의 일시적인 경기부양정책이 한국의 대기업에게 상대적인 수혜를 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국 정부의 세제감면이 5, 6월 자동차 내수판매 급증을 가져온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국내 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도 마찬가지다.

최근 언론은 한국 자동차가 불황을 뚫고 미국시장에서 사상 최대의 판매실적을 올렸다고 앞 다투어 보도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8월 판매량이 작년 대비 47퍼센트나 증가한 6만467대를 기록했고, 기아차는 무려 60.4퍼센트나 급증한 4만 198대를 판매해 미국시장 진출이후 최대 실적을 올렸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8월 24일로 기간이 이미 종료된 신차 보조금 정책을 위해 미국 정부가 한 달 동안 30억 달러를 쏟아 부은 일시적 효과임을 감안해야 한다. 소비능력이 떨어진 미국 시민들이 정부의 신차 보조금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연비가 좋은 소형차를 구입했는데 여기에서 한국 자동차가 혜택을 많이 본 것이다.

환율이나 세제혜택 같은 일시적인 효과는 그 혜택이 제거되면 사라진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구조적 문제는 글로벌 차원의 과잉생산체제와 과잉소비체제가 이번 경제위기로 한계점을 맞으면서 상당기간 절대적 시장 규모 축소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번 경제위기의 핵심은 다수 국민의 소득을 정체시킨 상태에서 빚만 늘려 소비를 확대시켜온 '차입경제'의 한계가 드러난데 있다. 여기에서 이번 위기의 주범인 금융회사들은 금융공급을 '무제한'으로 팽창시켜 고수익 행진을 이어가면서 '차입경제'의 한 축을 지탱해왔던 것이고, 전 세계 제조업들은 객관적인 소비능력을 뛰어넘는 '과잉생산'으로 차입에 의한 소비에 화답하며 수익행진을 이어온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경제위기로 향후 경기 회복 여부와 관계없이 '차입경제 시스템'은 사실상 무너졌으며, 살아남은 금융회사들도 무제한 금융공급을 조만간 재개하기는 어렵다. 소비자들도 줄어드는 소득가운데 빚 갚고 저축하느라 소비를 급격히 팽창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글로벌 기업들의 '과잉생산'체제를 축소하는 것이다.

영국의 경제 전문지 The Economist에 따르면 전 세계 자동차산업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1년에 약 9400만 대에 이르지만, 2009년 현재 소비 여력은 6000만 대에 그쳐 3000만 대 이상의 과잉생산 체제가 된 실정이다. 글로벌 생산축소와 구조조정이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축소되는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치킨게임이 벌어지게 되고 여기에서 생존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미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업계 5위의 독일 키몬다(Qimonda)가 2009년 1월 자금압박으로 파산하면서 한국의 반도체 업계의 주가가 올라간 바 있다. 그러나 세계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은 아니다. 1등 금융기업 씨티그룹이 무너지고 1등 자동차기업 GM이 무너지는 것을 올해 상반기라는 짧은 시간에 모두 목격하지 않았는가. 일시적인 환경 요인에 의한 상승세로 과잉생산체제 축소기의 치킨게임에서 매번 승리할 수는 없다. 과거 일본이 80년대 이래 미국 자동차 시장을 잠식하며 미국의 Big3을 사실상 몰락지경에 까지 몰아간 것은 일시적인 요인 때문만이 아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에는 한국 초 대기업들이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다.

5. 한국의 삼성이 잘나가면 한국 국민도 잘 사는가

삼성과 현대 등의 초 대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되살려 도약하는 것 그 자체는 두 손을 들어 박수칠 일이다. 해당 기업의 직원들에게는 무엇보다 반가운 일이며 국가적으로 보아도 국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신용도를 호전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협력업체들에게도 나쁜 소식이 아니다.

이는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들이 기왕이면 골프나 수영, 피겨 등의 종목에서 자기 실력으로 세계적인 선수 반열에 들어가고 우승하는 것을 온 국민이 열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세계 피겨 정상권자 김연아와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 삼성은 그런 점에서 모두 박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김연아와 삼성이 다른 것이 있다. 삼성, 현대, LG 등은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다. 국민경제의 핵심적인 일원이면서 동시에 다수의 중소기업, 노동자와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경제를 함께 움직여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73조, 5.5조, 55조, 8만 4500명”

어떤 숫자인지 아는가. 한국 1위 기업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작년 말 기준으로 73조 원이고, 당기 순이익이 5조 5000억 원이며, 이익잉여금 누적 액이 55조 원이고, 직원 수자가 8만 4500명이라는 것이다. 김연아의 우승 기록 208점은 세계 신기록 달

성 그것으로 끝일 뿐 더 해석의 여지는 없다. 그러나 삼성의 수치는 다르다.

우선 그것은 대한민국 4800만 국민 가운데에서 최고의 핵심 인력들을 선별해서 기술개발과 상품을 만들고 그 상품을 국내 소비자들이 충분히(?) 벤치마킹해준 다음에 각종 국가 지원을 등에 업고 세계로 진출해 달성한 기록이다. 따라서 그 결과를 삼성, 또는 삼성의 대주주가 독식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경제 구성원들인 중소기업들과 노동자들, 그리고 국가재정으로 다시 순환되는 것이 마땅하며, 그래야만 그 결과가 다시 삼성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 경기침체가 바닥으로 질주하는 동안에도 대기업들이 수익행진을 계속했던 2009년 상반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2009년 초입인 2월 25일, 30대 그룹 채용 담당 임원들이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에 합의하며 발표한 내용은, 대졸 신입사원 연봉을 최고 28퍼센트까지 삭감하기로 하고, 기존 직원의 임금조정(삭감)을 통해 만들어진 자금으로 신규직원이나 인턴을 채용하겠다는 것이었다. 경제위기의 고통을 같이 분담하자는 취지였다. 이미 연초부터 법인세는 당초 최고세율 25퍼센트에서 22퍼센트로 3퍼센트를 감세해주기 한 것이 시행되고 있던 터였다.

그런데 임금삭감 보상(?)으로 30대 그룹이 2009년 상반기 집행한 투자금액(32조 6000억 원)은 전년대비 -15.7퍼센트 감소했고, 신규 고용(3만 500명, 30대 그룹 전체 직원의 3퍼센트)은 이보다 훨씬 줄어서 -32.6퍼센트 감소로 나왔다. 2009년 하반기에 약간 개선은 되겠지만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 않는다(<매일경제> 2009.7.2). 차라리 외국인들이 2009년 상반기에 전년대비 2.1퍼센트가 늘어난 직접투자를 했던 것이 기묘한 대조를 이룬다(지식경제부 발표, 200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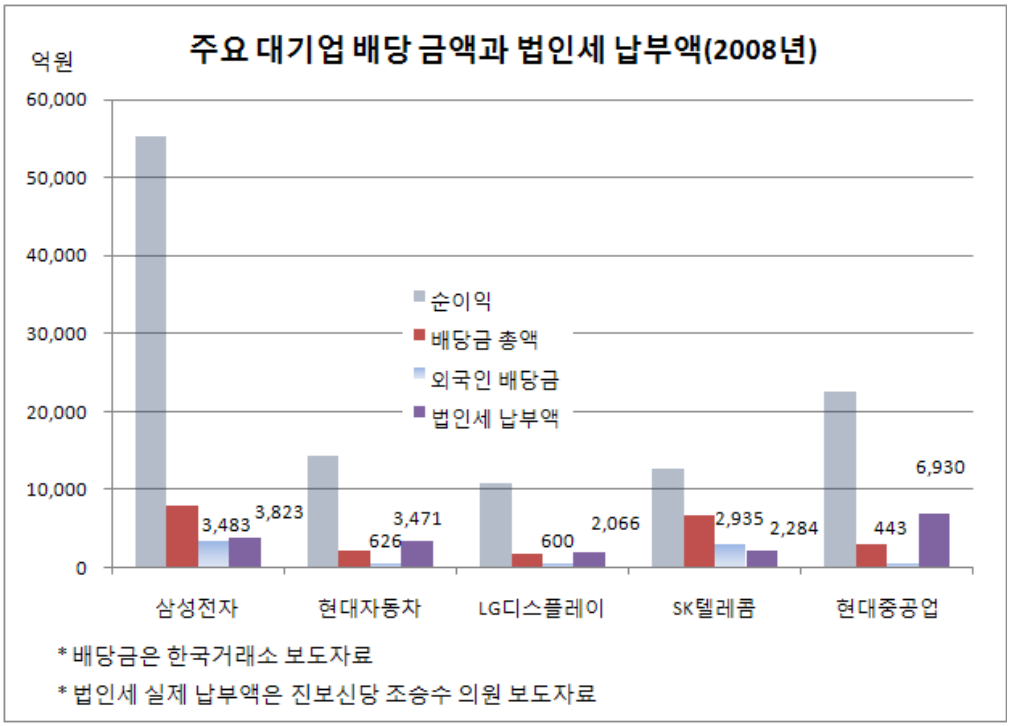
감세와 임금삭감까지 지원받으며, 더욱이 자동차는 세제감면혜택까지 덤으로 받으면서 흑자 행진 결과를 국내 설비투자나 고용확대로 돌리지 않았다는 얘기다. 결국 재정지출 여력을 소진한 이명박 정부가 초조해진 나머지, 하반기가 시작되자마자 7월 1일 대통령이 직접 "대기업이 투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투자를 촉구했고 다음날에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을 발표하며 지원책을 쏟아내야 했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도 민간 대기업들이 미덥지 않았던지 한국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와 같은 애꿎은 공기업들을 다그쳐 당초 계획보다 무려 16퍼센트 가깝게 늘어난 1조 원 이상의 추가투자를 지시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던 것이다(<연합뉴스> 2009.7.2).

그런데 반도체는 그렇다 치고 생산확대에 따라 그 만큼의 인력 확대가 수반되는 자동차 산업에서, 일시적이나마 내수가 폭발하고 수출이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어째서 고용을 늘리지 않았던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해외 현지 공장에서 현지인들을 고용하여 현지에서 판매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 자동차 회사들은 2009년 7월 기준으로 내수 판매를 약 12만 대, 국내에서 생산하여 수출판매를 약 18만 대, 해외 현지에서 생산하여 해외판매를 약 17만 대를 했던 것이다. 작년에 비해 수출은 -30퍼센트 이상 줄었지만 해외 생산은 오히려 7퍼센트 이상 늘어났다(한국자동차공업협회, <자동차산업동향>). 그러니 고용이 늘었다면 해외 고용이 늘었을 뿐 수출 감소로 국내 고용은 거꾸로 줄어들 요인만 생긴 것이다.

결국 현대와 기아자동차의 기록적인 미국판매 실적은 한국경제 고용 증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이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자동차 생산의 초국적화가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한국의 초 대기업들이 비록 국내 설비투자나 고용을 크게 늘리지는 않았지만, 위기와중에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으로 상당 규모의 법인세를 납부하여 국가의 재정지출에 기여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는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도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부분 대기업들은 2008년 기준으로 벌어들인 수익 가운데 15퍼센트에서 심지어 100퍼센트 이상을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지급했었다. 그리고 다시 그 배당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은 43퍼센트, 현대자동차는 26퍼센트를 외국인 배당으로 돌렸다.



반면 이들에게 적용될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8년에 25퍼센트였지만 각종 감면혜택 등으로 줄고 줄어서 삼성전자는 고작 6.5퍼센트, 현대자동차도 19.3퍼센트, SK텔레콤은 15.2퍼센트 밖에 실제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그 결과 삼성전자는 이익을 내서 외국인 배당으로 준 금액이나 국가에 법인세로 낸 세금이 거의 같은 수준이 되었고 SK텔레콤은 아예 국가에 낸 세금보다 외국인에게 배당으로 준 금액이 높은 상황까지 연출된 것이다. 그나마 2008년에는 외국인이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전년 대비 외국인 배당금이 절반으로 줄었기에 이 정도이지 평년이었으면 법인세보다 훨씬 커졌을 것이고, 올해에 외국인 주식 비중이 다시 30퍼센트를 넘어서고 있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올해 역시 수치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5조 5000억 당기 순이익, 8000억 배당금, 3500억 외국인 배당금, 3800억 세금 납부, 1조 세액공제 감면 금액"

삼성의 또 다른 기록들이다. 돈 벌어서 국내 설비투자도 제대로 안하고, 국내 고용 기여도 보잘것없고 그나마 세금도 외국인 배당정도 밖에 안된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정부가 대기업 투자확대를 가져올 것이라며 그토록 집요하게 추진했던 감세정책의 결과는 대기업의 투자확대가 아니라 순이익과 현금유보 확대로 귀결되고 국가의 재정적자 확대로 귀결될 가능성을 똑똑히 보게 된다. 다시 질문을 던져보자. 김연아가 우승하면 한국 국민은 기쁘다. 그러나 "삼성이 잘나가면 한국 국민도 잘 나갈까?"

6. 글로벌 기업으로 접근할수록 국민경제와는 멀어진다

외환위기 직후 정책결정자들은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해 대기업들을 살리고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면서 이른바 '아랫목, 윗목' 주장을 폈었다. "아랫목이 따뜻해진 다음에 곧 윗목이 따뜻해 질것이니 기다려라"는 논지였다. 그러나 이후 사회 양극화 현상이 단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듯이, 우리 국민은 지난 10여 년간의 체험을 통해 "아랫목은 영원한 아랫목, 윗목은 영원한 윗목"이 진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국민경제라는 같은 방 안에 사는 것도 아니고 "4대 그룹을 위한 따뜻한 안방과 4000만을 위한 싸늘한 곁방"이 따로 갈라서는 지경에 이른 것 같다. 4대 그룹에게 초일류 기업으로 비상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는 4000만에게 과거의 양극화 이상의 고통을 감수하게 하는 최악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예상은 과장된 것일까.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를 분기점으로 삼성과 현대를 필두로 한 한국의 초 대기업들

은 또 한 번의 도약과 변신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이 있다.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보건데 그들이 더 큰 글로벌 기업으로 접근하면 할수록 우리 국민경제, 그리고 우리 국민과의 간격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2009년 주식시장 재반등의 주역 외국자본

2009.9.11 | 김병권_새사연 부원장 | bkkim21kr@saesayon.org

목 차

1. 안개속의 경기전망, 그러나 알고 있는 세 가지
2. 금융위기 사실을 잊어버린 '여의도 증권가'와 '강남 부동산 업계'
3. 수퍼추경의 1.5배, 50조 원으로 한국 자본시장을 되살린 외국인
4. 한국 주식시장의 외국인은 역시 월가의 사람들
5. 한국의 글로벌 대자본, 증시에서도 주가를 높이다.
6. 그러나 금융은 아직 살아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http://saesayon.org

1. 안개속의 경기전망, 그러나 알고 있는 세 가지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라고 요란했던 글로벌 금융거품 폭발의 신호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지 만 1년이 돌아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수한 기관들의 경제 전망치들을 무참히 무너뜨리며 전 세계에서 급격히 진행되던 경제시스템의 붕괴 추세가 일단 멈추었다. 그러나 한 치 앞도 예측하기가 어렵기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세계경제는 여전히 안개속의 미로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적어도 공유 가능한 몇 가지 대목은 있다. 첫째는 경기가 추락을 멈추고 회복세로 가고 있지만 회복은 대단히 느린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주로 지금까지 경기회복을 주도한 정부역할을 민간이 떠안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글로벌 민간소비위축이 장기화될 것이며 동시에 세계적인 과잉생산 규모 축소 조정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경기회복과정에서 또 다시 경기가 추락하는 '더블딥' 가능성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루비니 교수가 주장하는 '출구전략 딜레마'가 대표적인데, "재정적자 해소와 시중의 유동성 회수를 위해 증세를 하고 재정지출을 줄이자니 다시 경기회복이 느려지면서 스태그 디플레이션(stag-deflation)이 올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지금처럼) 재정확대를 계속하자니 재정적자가 누적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국채수익률과 대출 금리가 상승해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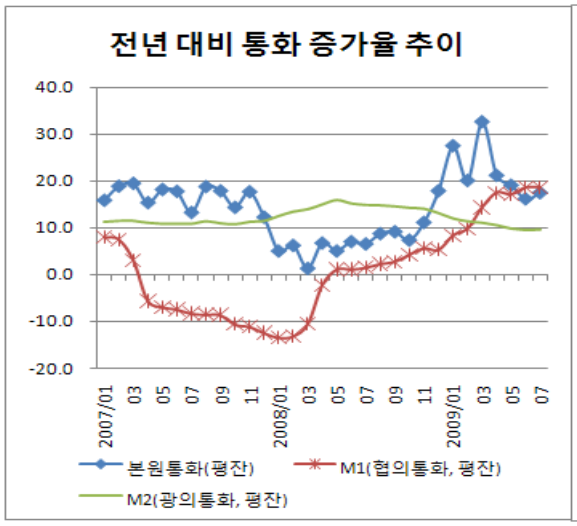
셋째는 각 국가마다 양상은 다르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채 안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연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5300억 달러에 이르는 상업용 부동산 부실이 잠재된 뇌관이고, 유럽은 2009년 2월에 폭발 직전까지 갔던 동유럽 국가에 물려있는 서유럽 은행부실 위험이 아직 살아있다. 아시아에서는 미국을 대신해 세계경기 회복 주도국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중국에서 자산시장 거품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시장에 풀린 막대한 돈 가운데 20퍼센트는 증시에, 30퍼센트는 부동산에 몰리며 자산 거품이 형성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속에서도 특이하게 상승세를 꺾지 않으며 700조까지 불어난 가계 부채 증가가 위험요소로 꼽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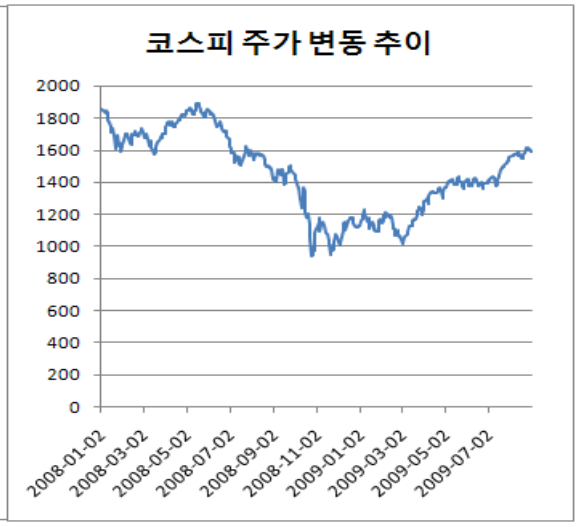
이처럼 "침체는 끝났다"는 선언들이 줄을 이으면서도 ▶ "회복이 시작되었지만 그 속도는 매우 느릴 것이다", ▶ "여전히 더블딥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 "세계 경제 곳곳에 위험요소들이 살아있다"는 정도의 공통된 인식아래 세계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에 대한 각 국가와 경제 주체들, 그리고 가계는 1여 년간 지속되어 온 금융위기 이후 앞으로의 1년을 걱정스럽게 맞이하고 있다.

2. 금융위기 사실을 잊어버린 '여의도 증권가'와 '강남 부동산 업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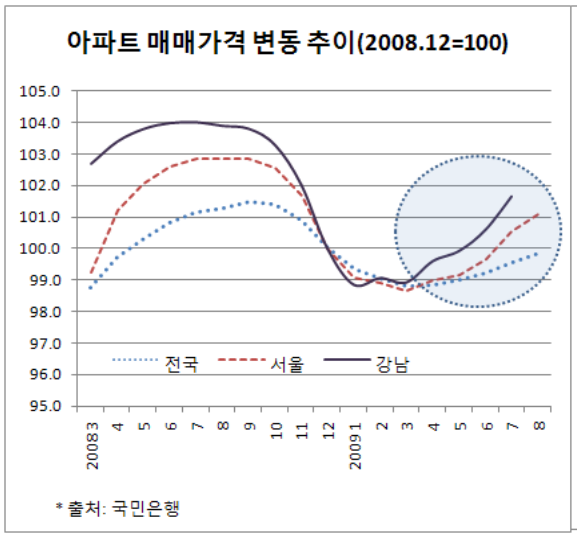
2008년 10월 이후 정부의 연속적인 금리 인하로 기준금리가 2퍼센트까지 내려가고 외화와 원화 유동성 공급으로 시중에 자금이 대거 풀렸지만 2009년 2월까지 주가와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를 멈추지 않았다. 특히 2009년 2월은 미국 발 상업은행 위기, 유럽 발 동유럽 국가 부도 위기, 그리고 한국의 외화 유동성 위기 조짐이 겹치면서 제 2의 금융위기가 우려되던 시점이었다(새사연, "제2 금융위기의 허와 실, 그리고 위기의 구조적 해결을 위한 양대 과제", 2009.2.23).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은 머니마켓펀드(MMF)와 같은 형태로 단기 부동화되면서 금융권을 맴돌고 있을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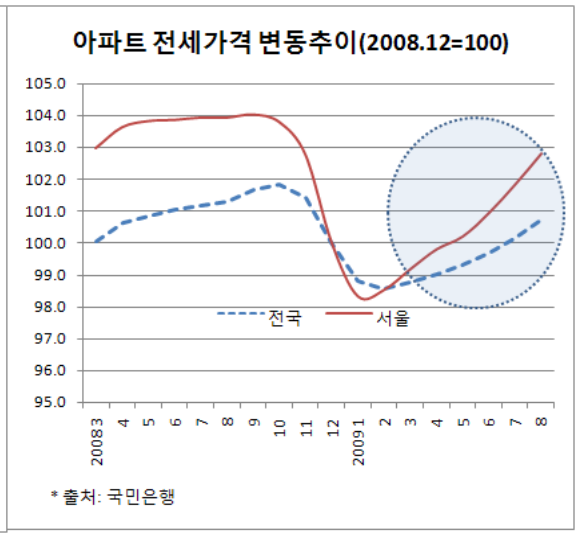
그러나 3월 초부터 상황은 서서히 반전되기 시작한다. 2009년 3월부터 위기의 진원지 미국에서 씨티은행 국유화가 확정되고 미국의 19개 대형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은행 부실자산 인수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1000원 선으로 떨어진 한국의 주가는 서서히 오르더니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서 결국 7월에 1500선을 돌파했고 8월에는 1600선마저 넘어설 정도로 고속 상승 가도를 달리게 된 것이다(그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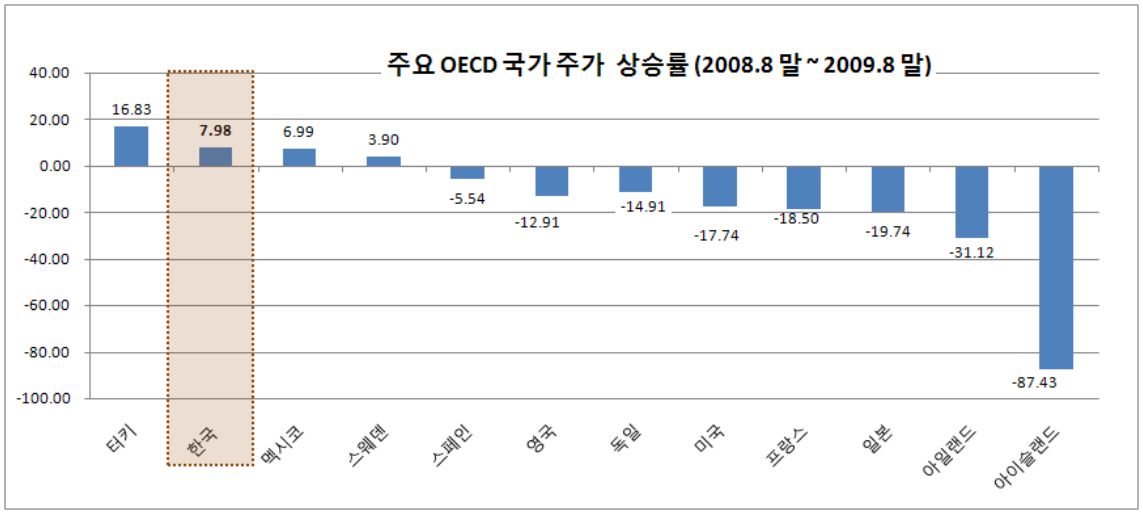
금융위기 한복판에서 정부가 풀기 시작한 각종 재건축 규제완화와 투기지역 해제 등 부동산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내리막길을 멈추지 않았던 부동산 가격도 주가 상승시점에 맞추어 다시 반등을 시작한다. 비록 국지적이지만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하여 상승하던 부동산 가격이 속속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기 시작했으며 매수심리는 2008년 초를 이미 훨씬 넘어 버렸다(그림 참조). 그에 따라 전국 미분양 주택도 2009년 3월 16만 5000호를 최고 정점으로 해서 3개월 뒤인 6월에는 14만 5000호로 서서히 줄어드는데 까지 이른다(국민은행, "지역별 미분양 현황", 2009.8).





매매가격 반등과 함께, 그 보다 훨씬 더 가파른 속도로 뉴타운 재개발 요인이 연동되어 전세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2009년 9월 현재 아파트 전세가격 폭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부가 긴급히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바야흐로 금융위기의 짙은 먹구름이 한국의 자산시장에서부터 빠르게 걷히기 시작했고, '여의도 증권가'와 '강남의 부동산 업계'는 언제 금융위기가 있었냐는 듯 금융위기 사실 자체를 잊고 한창 들뜬 분위기로 돌아서게 된 것이다. 물론 2009년 3월부터 자산시장의 상승반전은 상당 정도로는 글로벌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승률은 세계적 추세를 감안한다하더라도 상당히 빠른 것이고 이례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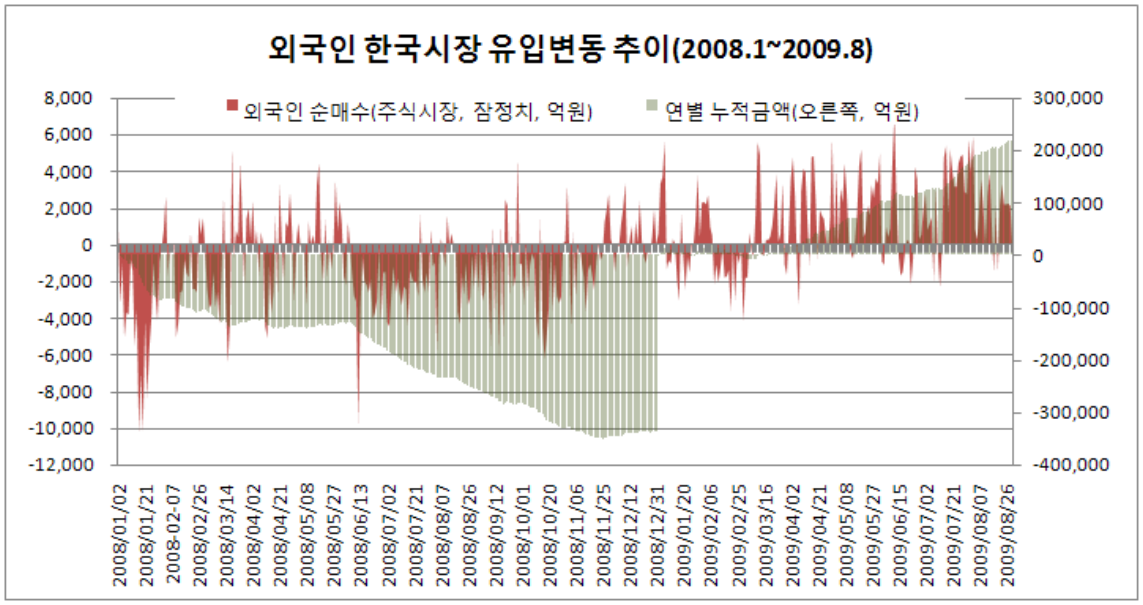
예컨대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2008년 8월 말 대비 2009년 8월 말 비교), 한국의 주가 상승률은 +8퍼센트였는데 이는 OECD 국가들 가운데 터키

다음으로 높은 것이다(그림 참조).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과 뚜렷이 대비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가는 2009년 초와 대비해도 8월 말 기준 37.5퍼센트가 올랐는데, 이 역시 중국의 46.5퍼센트 상승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미국의 5.1퍼센트에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상승률이다.

주식시장이 통상 실물경기에 선행한다고는 하지만, 2009년 5월까지도 산업생산이나 수출과 소비, 고용 등이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이처럼 빠른 속도로 상승했고, 7월 이후 외형적인 실물지표가 개선되었다는 발표까지 이어지자 주가는 1500선에 이어 1600선까지도 넘어서게 된 것이다. 금융위기 1년 만에 이제는 자산시장의 거품을 다시 걱정하는 상전벽해의 처지로 급변하게 되었다.

3. 수퍼추경의 1.5배, 50조 원으로 한국 자본시장을 되살린 외국인

그렇다면 금융위기의 폐허 속에서 2009년 한국 주식시장의 화려한 부활을 이끈 장본인은 누구인가? 2008년 주가 폭락을 주도했던 외국자본이 바로 그 당사자였다. 외국자본이 2008년에는 주가 폭락의 주범이었고 2009년 주가 폭등의 주역이기도 했던 것이다.



2007년 말까지 한국 주식시장에서 32퍼센트를 넘는 비중으로 최대의 큰손으로 군림하던 외국인은 2008년 금융위기 국면에서 자그마치 33조 6000억 원의 주식을 팔아치우며 월가 살리기에 나선바 있다. 그 결과 한국 주식 비중은 그해 말 28.9퍼센트까지 떨어졌고 마지막 주가하락의 시점이었던 2009년 3월에는 28.3퍼센트까지

내려간다.

그러나 2009년 3월부터 한국 주식시장에 되돌아온 외국인은 놀라운 속도로 한국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2009년 9월 4일 기준 유가증권 상장 주식을 21조 5000억 원어치를 순 매수했고 시가총액 대비 비중을 다시 31.2퍼센트로 끌어올리게 된 것이다(그림 참조).

이는 코스닥 시장과 ETF(성장지수펀드)에서 팔아치운 금액 8조 5000억 원을 감안해도 13조원이 넘는 금액이며, 채권시장에서 순 매수한 금액 29조 원을 합하면 무려 50조 원 가까운 자금을 외국인이 한국 자본시장에 쏟아 부은 것이다. 이 규모는 우리나라가 올해 '수퍼 추경'이라는 용어까지 붙일 정도의 추가경정예산 규모 28조 7000억 원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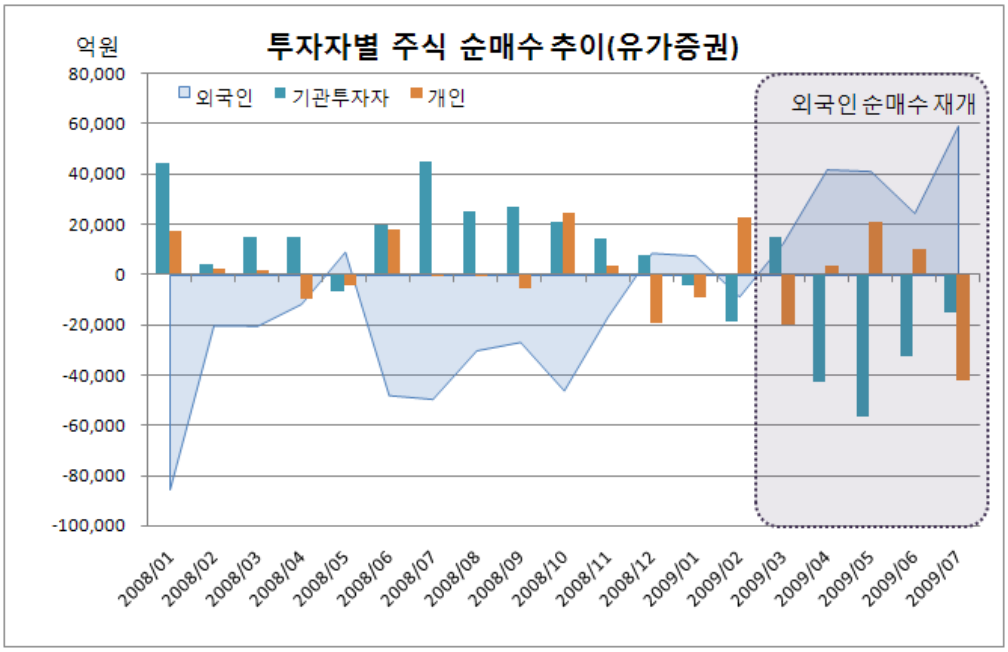
그 결과 올해 외국인 한국 주식 매입실적은 주식시장 개방이후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할 정도의 놀라운 것이었다. 2009년 7월 외국인이 사들인 주식매입 규모 6조 원은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고였으며, 집중 매수 기간으로 보아도 2009년 4월 ~ 7월까지 투자한 16조 5조 원도 역시 사상 최고 기록이다. 종전 기록은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지분율을 42퍼센트까지 끌어올리며 순 매수 행진 마지막 정점을 달렸던 2004년이었다(금융감독원, "2009년 7월까지의 외국인 상장주식 투자내역", 2009.8.6).

과연 한국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큰 손이 누구인가가 지난해에도 올해에도 수치로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이 역대 최고 금액의 주식을 사들이는 동안 기관들과 개미들은 무엇을 했을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관들은 대량으로 주식을 팔아 외국인이 원하는 물량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고, 개미들은 외국인들을 뒤늦게 좇는 형국이 되었다. 2006년 360만, 2007년 440만, 그리고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말에도 460만까지 불어나서 경제활동 인구 5명당 1명이 주식을 할 만큼 수많은 대한민국의 개미들은 지난해에도 올해에도 외국인의 움직임을 뒤따르기 바빴다고 할 수 있다(그림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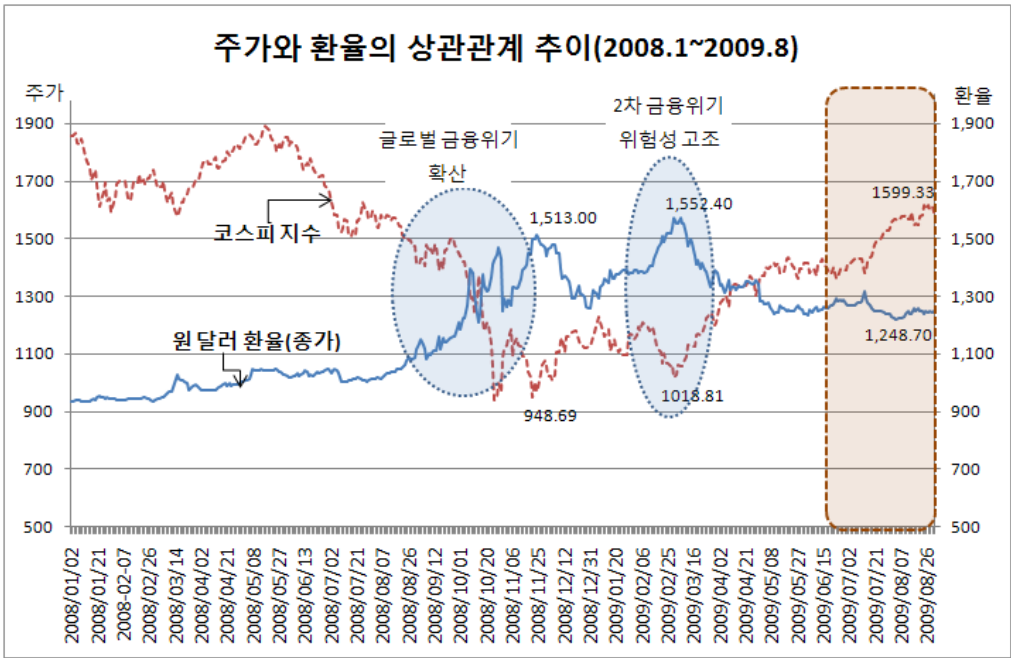
외국인의 대규모 순 매수는 당연히 대량의 달러를 한국 자본시장에 유입시켰고, 주식시장이 달러 공급자 역할을 하면서 환율을 떨어뜨리게 된다. 환율 하락은 불황형 흑자에 의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도 큰 영향을 미쳤지만 자본시장으로 유입된 외국자금의 영향도 막대한 것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위기가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원 달러 환율은 주가와 매우 밀접한 연동성을 가지고 움직여왔다. 주가가 오르면 환율은 내려가고 주가가 내리면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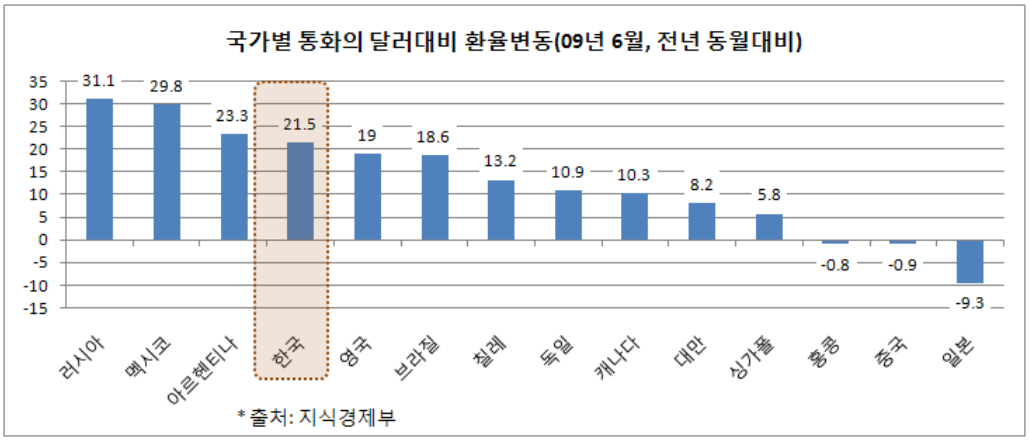
율이 오르는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졌던 것이고 이것은 올해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2009년 환율은 주가가 최저점을 기록했던 3월 초에 1550까지 치솟다가 그 후 지속적으로 떨어져 2009년 7월 중순이후에는 1250선에서 유지되고 있다(그림 참조).



다만 다른 것은 올해에는 주가가 최저점 대비 약 50퍼센트나 올랐는데 반해서 환율은 -20퍼센트 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즉, 주가는 이미 금융위기 이전 상태로 완전히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금융위기 이전 상태인 1000~1100선이 아니라 금융위기가 한창 폭발하던 시점인 2008년 10월 수준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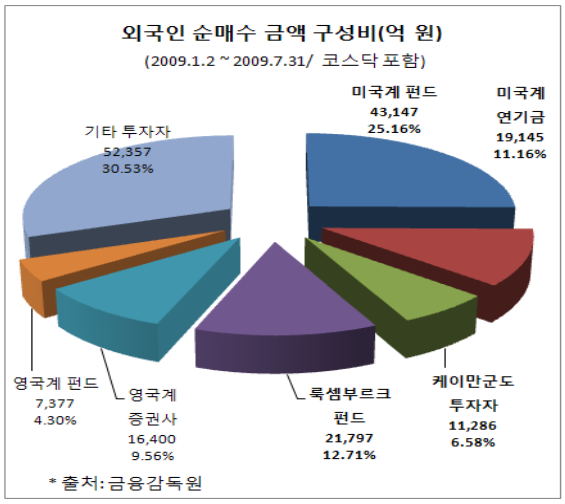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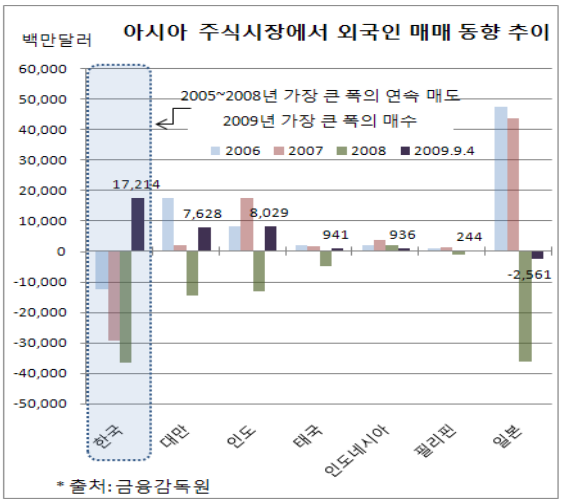
세계적으로 보아도 한국의 환율은 2009년 6월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21.5퍼센트 상승한 채로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다(그림7 참조). 특히 7월 이후에는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던데 비해서 환율은 거의 하락 없이 횡보하고 있다. 덕분에 환율효과가 유지되어 수출에는 대단히 유리한 환경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요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한 대목이다. 실제로 정부는 한국이 주요 국가 가운데 국제 무역에서 가장 환율 효과를 톡톡히 본 국가로 발표한 바가 있다(지식경제부, "환율변동이 국가별 무역에 비치는 영향분석", 2009.9).



4. 한국 주식시장의 외국인은 역시 월가의 사람들

다음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지점은 바로 그 '외국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예상했던 대로 월가 즉, 미국 금융자본이다. **올해 한국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외국자금은 공식적인 미국 국적의 자본이 36퍼센트를 넘고, 사실상 미국 자본이 주류인 조세회피지역 케이만군도 투자자를 합치면 미국계가 절반에 육박한다. 여기에 당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룩셈부르크 펀드에도 미국계 자금이 상당히 있을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2009년 한국 증시는 미국 금융자본이 움직였다고 보아도 무방하다(그림 참조).**





그런데 금융 불안 진정세로 여유를 찾은 월가의 생존자들이 한국 자본시장으로만 돌아왔을까. 물론 그것은 아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 신흥시장에 외국자금이 다시 유입되었다. 다만 한국에 유입된 자금이 172억 달러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는 점이 다르다. 아시아 신흥시장 가운데에서도 한국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유독 외국자금이 연속해서 유출된바가 있었는데, 그 반대급부로 올해에는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되었던 것이다(그림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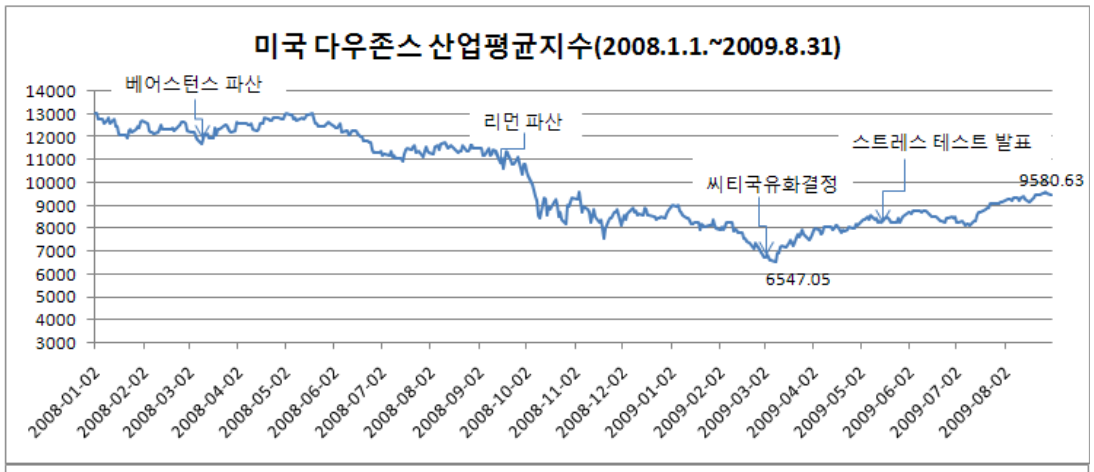
요약하면 월가의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한 외국자금이 금융위기가 바닥을 지났던 2009년 3월부터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고, 특히 아시아 신흥시장 가운데에서도 한국시장으로 집중적으로 몰려들었다. 그 결과 한국의 주가는 매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올라갔고 그에 비례하여 외국인 지분율도 다시 30퍼센트 위로 올라갔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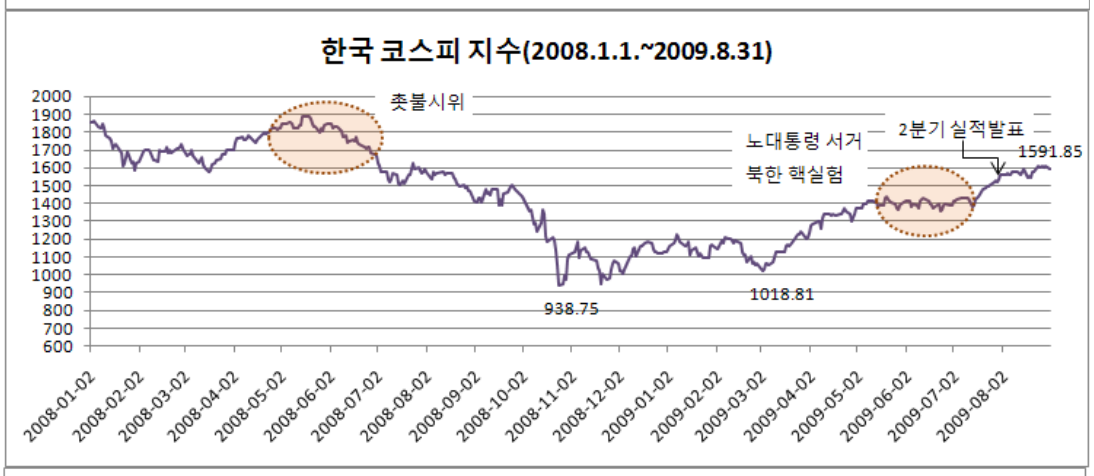
한 가지 덧붙인다면, 미국계 자금유입이 한국 주가 변동의 가장 큰 요인이었던 만큼, 한국의 증시는 여전히 미국의 주가와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부 한국의 기업실적 등 실물지표가 별도의 영향을 주기도 하고, 특히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큰 변수로 등장한 중국 지수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여전히 한국의 주식시장은 미국 주식시장의 강력한 영향권 아래 있고 미국 금융시장과의 강한 '동조화(coupling)' 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 한국의 무역 구조가 금융위기 이후 다시 미국과의 연계성을 완화하는 대신에, 2009년 8월에는 대 중국 의존도가 기존의 20~22퍼센트 수준에서 무려 28퍼센트까지 급증하고 있는 추세와 확연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그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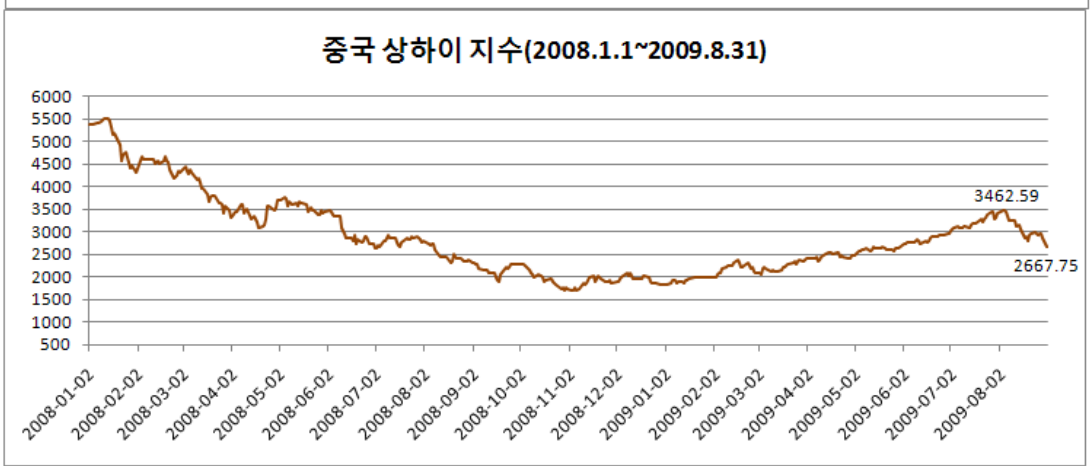
5. 한국의 글로벌 대자본, 증시에서도 주가를 높이다

그런데 한국의 유난히 높은 주가 상승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짚어봐야 할 대목이 있다. 세계 경제침체와 소비위축의 한파를 뚫고 세계 시장 점유율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는 주요 초 대기업들이 한국의 주식시장에 주는 영향력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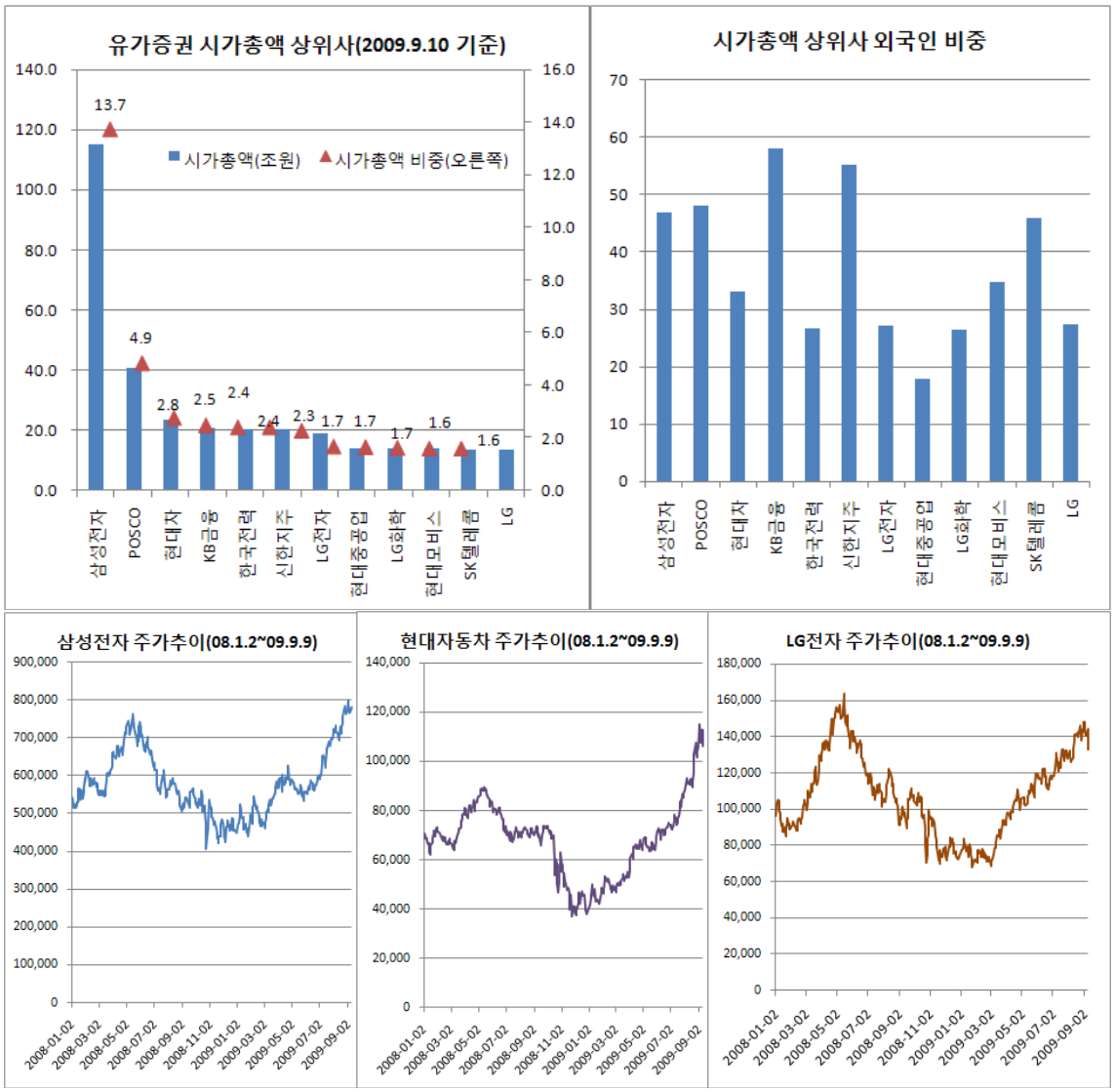
우리나라 초 대기업들의 규모는 단순히 매출액이나 영업 이익률뿐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 총액에서도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삼성전자 한 개 기업의 시가총액 115조 원이 전체 코스피 시가 총액의 13.7퍼센트에 달할 정도이다. 현대자동차 시가 총액 23조 원도 약 3퍼센트의 무거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 전체 주가가 결정된다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그림 참조).







이 같은 한국의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이번 증시 상승에서 보여준 활약도 눈부신 것이었다. 2009년 종합주가가 3월의 저점 대비 8월 말 평균 50퍼센트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것은 앞서 언급했다. 그러나 한국 초 대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은 평균 상승률을 훨씬 뛰어 넘고 있었다. 삼성전자는 거의 두 배(46만 원→ 79만 원), 지주회사 엘지도 거의 두 배(3만 8000원→ 7만 8000원)이나 뛰었고, 현대 자동차는 아예 두 배를 훌쩍 넘는 기록적인 상승률(4만 7000원→ 11만 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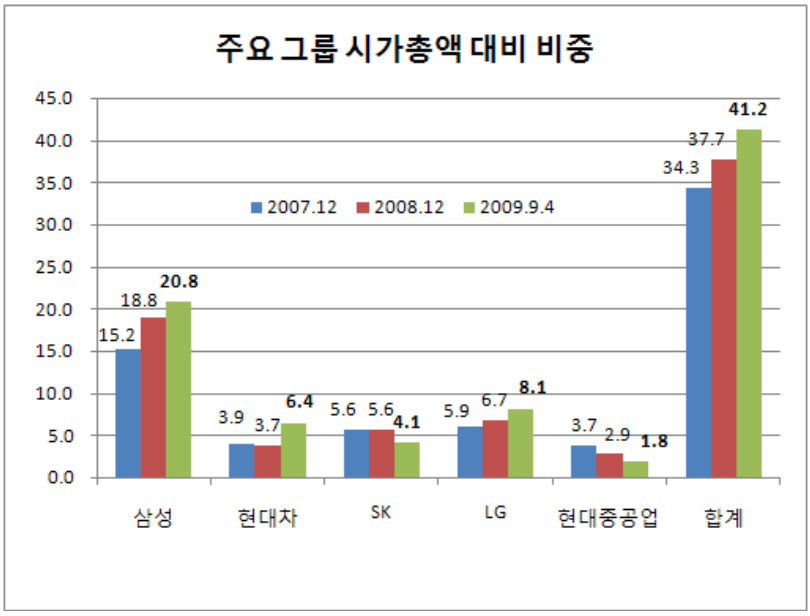
그 결과 현대 자동차 등 일부 기업들은 세계 경기침체 한복판에서 주가가 사상 최대의 기록을 세우는 신고점 갱신행진을 이어갔다. 전체 시가총액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 기업들이 수개월 만에 두 배 이상 뛰어오른다면 전체 주가의 급등은 필연적인 것이고, 나머지 기업들의 부진을 일거에 상쇄시킬 수 있는 것이다(그림 참조).

한국의 초 대기업들이 반도체, LCD, 자동차, 휴대폰 등의 분야에서 환율 효과를 등에 업고 세계시장 점유율을 단시간에 확대시키며 보여준 예상외의 실적이 주식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이고, 특히 7월 이후에는 이들 기업들의 2분기 실적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주가 급등을 주도했다(새사연, "삼성과 현대가 잘나가면 우리 국민도 잘 살까?", 2009.9.4).

물론 이들 초 대기업들의 주가 상승에는 역시 외국인의 공헌이 지대했다. 예를 들

어 외국인은 삼성전자 3조 5000억 원, 현대차 9800억 원, 지주회사인 LG가 7900억 원 정도를 순 매수했는데 그 사이 기관과 개인은 이들 기업에 대해 모두 순 매도를 기록했다.

한국 초대기업들의 주가 폭등은 계열 그룹사들의 시가총액 비중을 동반 상승시켜 삼성그룹은 전체 시가총액의 1/5이 넘게 되었으며 현대차 그룹은 6.4퍼센트를 차지하는 등 주요 5대 그룹의 시가총액이 자그마치 41.2퍼센트나 차지하게 된다.



요약하자면, 한국의 주식시장 폭등은 정부에 의한 저금리 기조와 거시경제지표 회복이 뒷받침된 가운데, 주요 초 대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방하며 실적을 올려가자 불황 속에서 수익처를 찾던 월가의 금융자본이 한국의 초 대기업들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자하면서 만들어진 일종의 3자 합작품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 공매도와 같은 금융자본의 투기적 움직임이 역으로 멀쩡한 기업들의 주가를 폭락시키고 자금난에 빠뜨렸던 상황이 연출되었다면, 대단히 국소적인 기업들에게만 해당되겠지만 다시금 기업실적이라고 하는 실물의 움직임이 주가라고 하는 금융변수를 움직이는 상황이 되었다고 해야 할까? 아무튼 2008년 9월 초 이른바 한국의 9월 위기설이 등장하면서 한국 주식시장이 요동쳤던 1년 전 9월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대목이다(새사연, “9월 위기설은 지나갔지만, 진짜 위기는 이제 시작”, 2008.9.9).

6. 그러나 금융은 아직 살아있다

금융위기 이후 1년 동안의 한국 주식시장의 극적인 변화 양상을 전반적으로 요약하

면 이렇다.

▶ 아시아에서 금융위기 충격을 가장 크게 받았던 한국은 2009년 3월을 반환점으로 금융위기의 짙은 먹구름이 자산시장에서부터 빠르게 걷히기 시작했고, '여의도 증권가'와 '강남의 부동산 업계'는 언제 금융위기가 있었냐는 듯 금융위기 사실 자체를 잊고 한창 들뜬 분위기로 돌아서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자산시장 상승률은 세계적 추세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더디기만 한 실물경제 회복에 비해 상당히 빠른 것이고 이례적인 것이었다.

▶ 3월부터 한국 주식시장에 되돌아온 외국인은 놀라운 속도로 한국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2009년 9월 4일 기준 유가증권 상장 주식을 21조 5000억 원어치를 순 매수했고 시가총액 대비 비중을 다시 31.2퍼센트로 끌어올리게 된다. 올해 한국 자본시장에 무려 50조 원 가까운 자금을 외국인이 쏟아 부었는데, 이 규모는 우리나라가 올해 '수퍼 추경'이라는 용어까지 붙일 정도의 추가경정예산 규모 28조 7000억 원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올해에는 주가가 최저점 대비 약 50퍼센트나 올랐는데 반해서 환율은 -20퍼센트 밖에 떨어지지 않아 일정하게 주가와 연계성이 완화되는 것처럼 나타났다. 즉, 주가는 이미 금융위기 이전 상태로 완전히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금융위기 이전 상태인 1000~1100선이 아니라 금융위기가 한창 폭발하던 시점인 2008년 10월 수준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있다.

▶ 올해 한국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외국자금은 공식적인 미국 국적의 자본이 36퍼센트를 넘었고, 사실상 미국 자본이 주류인 조세회피지역 케이만군도 투자자를 합치면 미국계가 절반에 육박한다. 여기에 당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룩셈부르크 펀드에도 미국계 자금이 상당히 있을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2009년 한국 증시는 미국 금융자본이 움직였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 한국의 증시는 여전히 미국의 주가와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 일부 한국의 기업실적 등 실물지표가 별도의 영향을 주기도 하고, 특히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큰 변수로 등장한 중국 지수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여전히 한국의 주식시장은 미국 주식시장의 강력한 영향권 아래 있고 미국 금융시장과의 강한 '동조화(coupling)' 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 이는 무역구조가 점점 더 미국과의 연계성을 완화시키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 한국의 초대기업들은 세계 경기침체 한복판에서 주가가 저점 대비 두 배 이상 상승하고 사상 최대의 기록을 세우는 신고점 갱신행진을 이어갔다. 전체 시가총액

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 기업들이 수개월 만에 두 배 이상 뛰어오르면서 증시 상승을 주도했고 나머지 기업들의 부진을 일거에 상쇄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 삼성그룹은 전체 시가 총액의 1/5이 넘게 되었으며 현대차 그룹은 6.4퍼센트를 차지하는 등 주요 5대 그룹의 시가총액이 자그마치 41.2퍼센트나 차지한다.

▶ 한국의 주식시장 폭등은 정부에 의한 저금리 기조와 거시경제지표 회복이 뒷받침된 가운데, 주요 초 대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방하며 실적을 올려가자 불황 속에서 수익처를 찾던 월가의 금융자본이 한국의 초 대기업들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자하면서 만들어진 일종의 3자 합작품 성격이 강하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국의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은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현재 한국경제와 자본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한국정부와 한국의 초 대기업, 그리고 월가 금융자본의 '지탱능력의 지속성' 여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아직은 민간 기업과 가계가 바통을 이어받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미 '단기 신속대응'으로 성과를 올렸던 한국 정부는 그 만큼 '장기 지속대응능력'의 여력이 점점 줄고 있는 형편이고, 한국의 초 대기업들도 앞으로 환율효과를 제거한 후 글로벌 과잉생산 축소와 치킨게임에서 매번 승자가 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미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한국에 투입한 월가 자금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여전히 한국행을 지속할 것인지도 불확실하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체이스,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 등 금융시스템 붕괴의 폐허 속에 살아남아 지배력을 더 높인 월가의 자본이 금융팽창의 과거 영예를 재현할지는 더욱 불확실하다.

두 가지 확실한 점이 있다. 하나는 한국의 자본시장이 금융위기 이전이나 이후나 모두 외국자본의 강력한 영향권 아래 놓여있다는 사실이다. 앞으로도 한국증시의 향방은 한국 국민경제가 아니라 월가에게 물어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의미다. 그런데 금융위기의 뇌관들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가 회복세를 타자 숨죽였던 월가의 주요 플레이어들은 아직 시작도 안한 금융규제책에 대해 사실상 무력화에 나서고 있고 월가 출신들로 채워진 오바마 행정부도 여기에 동조하는 기세다.

언제든지 월가 금융불안의 재발로 인한 한국 자본시장도 불안 국면으로 빠질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 역시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열려있는 공간에서 금융진정세를 타고 뒤늦게 금융팽창을 본격화할 경우 미래는 더욱 안개 속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

또 하나는, 한국 정부와 한국 초 대기업이 만들어 준 토양위에서 단기 차익을 보고 물밀듯이 밀려드는 외국자금을 뒤따르느라, 고용불안과 소득감소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도 잊은 채 자산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한국의 가계가 안전장치 없는 새로운 금융 불안의 뇌관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그 조짐은 벌써 나타나고 있고 금리 인상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위험성의 실체는 더욱 선명해질 것이다.

금융위기의 교훈과 과제

2009.9.16 | 여경훈_새사연 연구원 | khyeo@saesayon.org

목 차

1. 미국 9.7퍼센트 실업률의 의미
2. 금융위기를 초래한 99년 이후의 규제완화 조치들
3. 2004년 신바젤협약 체제와 금융환경의 변화
4. 금융위기의 교훈과 과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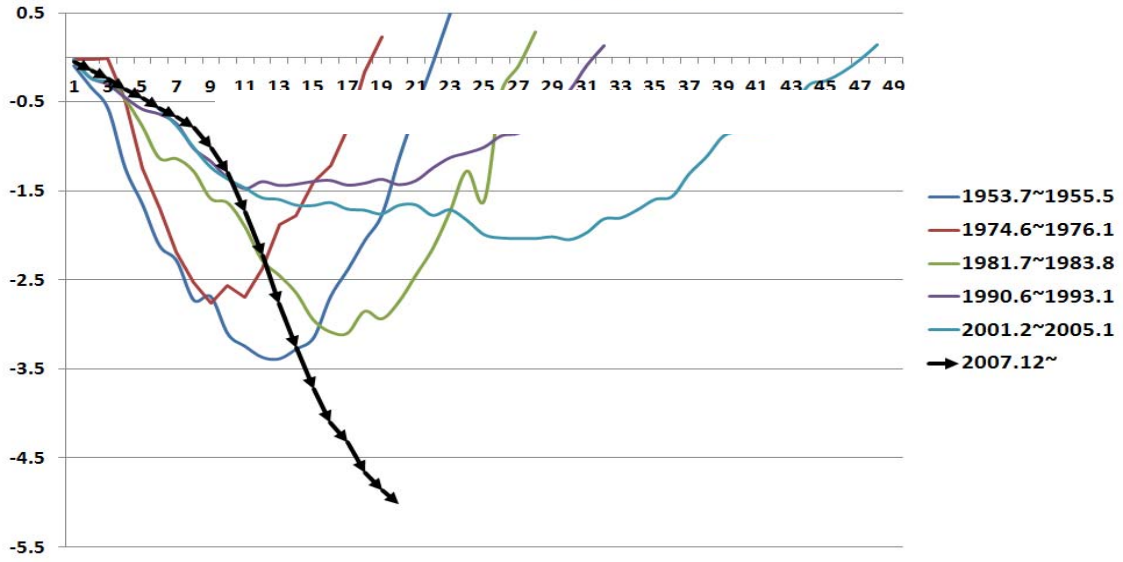
http://saesayon.org

1. 미국 9.7퍼센트 실업률의 의미

지난 해 세계 금융시장을 공황으로 몰고 갔던 리먼 사태가 발생한지 정확하게 1년이 되는 날이다. 미국의 제로금리와 12조 달러가 넘는 유동성 공급, 그리고 8000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의 재정지출은 다행히도 극단으로 치닫던 시장의 패닉을 차단하였다.

그러나 시장에 내재한 호황-불황(boom-bust) 동학은 또 다시 버블을 우려할 정도로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한국의 경우 900p까지 떨어진 주가는 1600p를 훌쩍 넘어서고, 부동산시장은 2006년 버블의 턱 밑까지 치고 올라갔으니 말이다. 그러나 한국경제에 잠재되어 있는 수많은 위기 요인들, 부동산, 가계, 기업, 정부 부채, 취약한 외환시장, 자본시장의 변동성 등을 고려할 때 한국경제는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형국이다.

그림. 경기침체 기간 고용감소의 역사적 비교(정점~바닥)



무엇보다 미국경제의 침체는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8월, 미국의 공식 실업률은 9.7퍼센트로 1493만 명이 실업상태에 놓여 있다. 2007년 12월 경기침체가 시작되었으니, 이번 금융위기로 74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한 셈이다. 게다가 구직을 포기했거나, 현재 시간제로 일하고 있지만 전일제 근무를 원하는 노동자를 포함한 실질실업률은 16.8퍼센트에 이른다. 경제활동인구 여섯 명 중 한 명꼴로, 대략 2600만 명이 사실상 실업의 고통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위의 그림은 경기침체 기간, 고용시장의 정점에서 감소, 그리고 회복까지의 추세를 연결한 것이다. 1950~70년대까지만 해도 경기침체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다. 대

략 1년 정도 지나면 바닥을 확인했고, 다시 1년이 지나면 침체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부터 회복기간이 점차 길어졌으며, 2000년대 초반의 침체기에는, 고용상태가 회복되기까지 무려 48개월의 시간이 필요하였다. 최근의 경기하강 추세를 나타낸 것이 위의 검은 화살표다. 비록 연초 70만 명에 달하던 일자리 감소가 최근 22만 명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바닥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시장의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내년 2~3사분기에 즈음하여 바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이는데,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GDP의 70퍼센트를 차지하는 민간소비의 구매력이 고용상태에 주로 의존하고 취약한 민간소비와 기업투자가 주어진 조건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나 금융시장의 충격은 언제든지 침체를 더 악화시킬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2. 금융위기를 초래한 99년 이후의 규제완화 조치들

6월 17일, 미 재무부는 1930년대 뉴딜 금융체제 이후 80여 년 만에 대대적인 금융감독구조 개편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금융규제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미국의 금융규제와 감독의 역사를 보면, 공황에 버금가는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야 금융시스템의 의미 있는 개혁을 구축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금융위기는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달러체제가 초래한 글로벌 불균형, 그림자 금융체제, 신자유주의 금융축적체제, 증권화로 특징짓는 금융산업 수익의 구조적 변화, 공포와 탐욕, 그리고 인센티브 구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탈규제' 정책과 이데올로기, 그리고 이것이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밝히는 작업일 것이다. 이는 금융시장의 새로운 규제와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데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 정부 개입은 '문제'이며 시장의 자기규제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성행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1980년부터 9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규제완화 조치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2004년을 기점으로 서브프라임과 증권화(securitization) 시장의 급팽창했음을 고려할 때, 20세기 말에 일어났던 일련의 조치들을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닷컴버블 붕괴 이후 금리를 1퍼센트까지 내린 이후, 2004년부터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이 기간 폭발적으로 부동산 파생상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첫째, 1999년 금융현대화 법안(Financial Modernization of 1999)은 금융기업의 다각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따라서 단기 수익률 및 시장 점유율 경쟁에 몰입한 금융기업들은 핵심사업과 무관한 비전문 사업 부문에 무차별적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이른바 금융빅뱅의 신천지가 열린 셈이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의 대표적 피해자가 AIG라고 할 수 있다. AIG는 전 세계 130개 국가에서 11만 6000명을 고용한 세계 최대의 보험회사였다. 그러나 AIG의 몰락은 AIG Financial Products라고 알려진 소규모 런던 지사의 부실에서 비롯되었다. 직원이 400명도 채 되지 않은 이 조그만(?) 회사는 엄청난 규모의 신용부도스왑(CDS)을 거래하였다. 회사채(2,940억 달러), 유럽의 주택담보대출(1,410억 달러), 서브프라임 CDO(780억 달러) 등 5,130억 달러에 달하는 CDS를 거래하다 그룹 전체를 몰락하게 만들었다.

둘째, 2000년의 상품현대화 법안(Commodity Futures Modernization Act of 2000)의 도입이다. 이 조치로 SEC(증권선물거래소)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지니고 있었던 스왑 거래에 대한 규제 권한이 사실상 폐지되었다. SEC의 경우, 모든 증권 관련 스왑 거래(any security-based swap agreement)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금지되었다. 또한 CFTC는 '농업 상품'에 대한 규제만을 책임지도록 '현대화'되었다. 따라서 신용부도스왑(CDS)이나 주식부도스왑(EDS) 등은 이 조항에 따라 아무런 규제나 감독 없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CDS가 기초자산의 디폴트에 대비한 파생상품인데 비해, EDS는 기업의 주가하락에 대비한 파생상품이다. 새로운 금융환경의 변화로 CDS 시장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62조 달러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Figure 2: US Commercial Banks – Asset Composition
As a per cent of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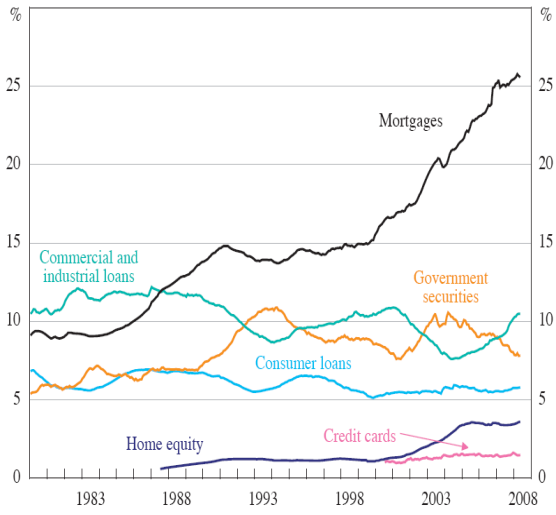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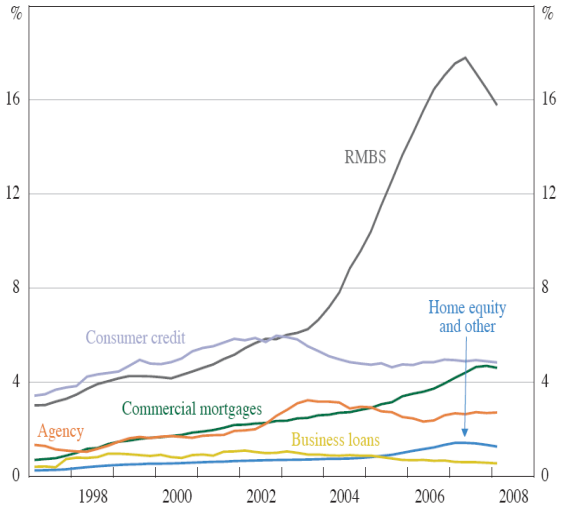


Figure 3: RMBS versus Other Securitised Assets
As a per cent of GDP



세 번째로 주목되는 법안이 2000년 11월 수정된 '피고용자 은퇴소득 보장 법안(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이다. 이 법안은 1999년 10월, 모건스탠리가 노동부에 보낸 요구에 기초하여 수정된 것으로, 연기금이 투자등급 특수목적법인(SPE) 증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1] 이 법안이 도입됨에 따라 기초자산이 투자등급 이하일지라도, 증권화 과정에 따라 MBS, ABS, CDO2 등으로 각색된 BBB 이상 증권을 연기금이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부동산 파생상품의 투자수요를 증가시켜,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버블을 유지시킨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물론 앞서 언급한 CDS 시장의 활성화가 CDS 거래로 위험을 회피하는 새로운 CDO(예를 들어 합성 CDO) 개발의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넷째, 2004년을 기점으로 한 일련의 규제완화 및 정책변화 조치들이다. 이는 2004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서브프라임 대출 및 부동산 파생상품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위의 그림[2]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주택담보대출(Mortgages)은 GDP의 20퍼센트(04년 1월)에서 26퍼센트(08년 3월)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증권화한 RMBS는 GDP의 7퍼센트(04년 3월)에서 18퍼센트(07년 6월)까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3. 2004년 신바젤협약 체제와 금융환경의 변화

우선, 2004년 6월에 최종 확정되어 공표된 바젤2 '권고안(revised framework)', 즉 신바젤협약 체제로 전환되는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3] 기존의 바젤 체제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위험 가중치가 50퍼센트였는데, 바젤2 협약에 따르면 35퍼센트로 줄어들게 되었다. 즉 기존의 자본금을 가지고도 주택담보대출을 상대적으로 늘리면 BIS 기준을 충족시키고도 자산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감독당국의 승인만 받으면, 은행 자체적으로 내부 신용평가모형(Internal ratings-based; IRB)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조사에 따르면, 신바젤협약 체제에서는 내부평가모형을 도입하면 65퍼센트 정도의 위험가중치를 줄일 수 있다. 즉 주택담보대출에 50퍼센트가 적용되던 위험가중치가 15~20퍼센트로 줄어든다는 말이다.

또한 MBS나 CDO와 같은 자산유동화 증권은 바젤2 체제에서는 신용등급별로 가중치가 매겨지는데, AAA 등급인 경우 가중치가 7퍼센트로 줄어들 수 있다. 상업은행

1) Tymonige(2009), Securitization, Deregulation, Economic Stability, and Financial Crisis.
2) Blundell-Wignall & Atkinson(2008), The Sub-prime Crisis: Casual Distortions and Regulatory Reform.
3) OECD(2008), The Current Financial Crisis: Causes and Policy Issues.

의 입장에서, 대출채권을 매각하여 위험이전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자산에 대한 자기자본규제가 면제될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를 종합하면, 은행은 신바젤협약 체제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35퍼센트까지 줄일 수 있으며, 내부평가모형을 도입하면 최대 15퍼센트까지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위험이전요건을 충족하거나, 높은 신용등급을 통해 부동산 파생상품에 더 낮은 위험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금융기업은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게 BIS 비율을 충족하면서도 최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장부상의 조정을 2004년부터 미리 진행하였다. 전직 투자은행 고위 임원의 증언은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해준다.

“우리는 2004년에 공표된 바젤2의 의미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비즈니스 환경에 실로 엄청난 변화를 의미하므로, 시행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었다. 내부 세미나와 미팅은 2004년 공표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는 적어도 4~5년 동안 검토하고 예상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이것은 정확히 세제 변화와 동일하다.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영역은 더 넓어진다!…내부 비즈니스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내부자도 완전히 알기 어려운데, 외부자(감독기관)가 알기란 불가능하다. 어떻게 측정하고 보고해야 하는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무한하다. 우리의 내부 과정과 자원은 막대하므로, 이 세상에서 제아무리 최대의 능력을 지닌 감독기관도 우리를 따라 갈 수는 없다.”(Blundell-Wignall, 2008)

바젤2는 유럽에서 2007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예를 들어 파산한 영국의 노던록 은행을 보면 이는 더욱 명백해진다. 노던록은 2년 반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7년 6월부터 바젤2를 적용하였다. 연평균 25퍼센트의 자산 증가율, 75퍼센트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로 자산을 집중하였는데, 바젤2가 제공한 규제차익의 독약을 마신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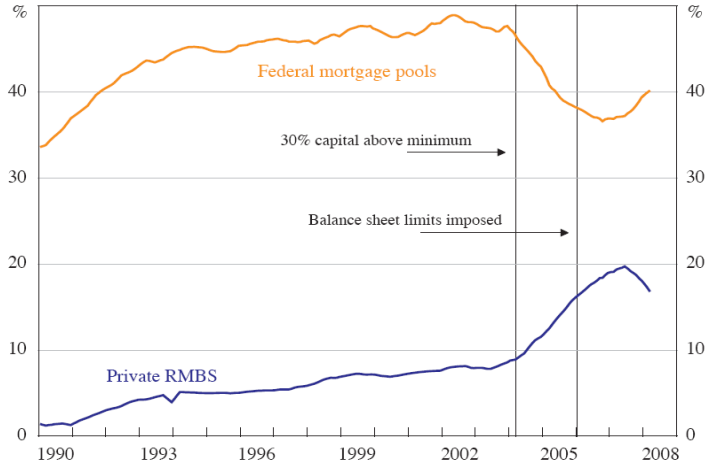
금융위기가 폭발하기 직전인 2007년 6월, 노던록의 핵심자기자본(Tier 1)은 22억 파운드에 불과했다. 총자산(1130억 파운드)의 1.9퍼센트에 불과했지만, 주택담보대출에 집중하여 위험가중자산이 190억 파운드로 대폭 줄어들었다. 따라서 총자산의 1.9퍼센트로 위험가중자산의 11.3퍼센트에 달하는 높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변화가 자산유동화시장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정부보증업체(GSE)에 대한 규제 강화와 월가의 시장점유율 증가다. 이른바 규제의 비대칭성에 따른 규제차익, 시장 편향의 규제가 초래한 문제점이다. GSE는 주택담보대출을

보증하고 유동성을 증가시켜, 미국의 일관된 주택정책인 자가 소유 확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공적 기관이다. 이에 비해 월가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을 GSE에 매각하고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수익을 창출하였다.

아래 그림4에서 보는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이 증권화 되는 비중은 90년대 초반 40퍼센트에서 2000년대에는 60퍼센트까지 상승하였다. 특히 2004년을 전후로 GSE의 점유율은 하락하는데 비해, 월가의 MBS 점유율은 급격히 늘어난다.

Figure 9: Federal Mortgage Pools versus RMBS
As a per cent of total mortgages



증권화 시장이 황금알 거위로 부상하자, 월가는 시시탐탐 GSE가 누리고 있던 시장에 진출하기를 희망하였다. 민영화라는 것이 사실, 대부분 정부나 공기업이 공급하는 시장에 사기업이 진출하기 위한 시장의 이데올로기다. 정부가 '문제'고 시장이 '해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말이다.

더구나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겸업할 수 있게 되면서 대출채권을 굳이 GSE에 매각하지 않고 자회사인 투자은행에 매각하여 자체적으로 증권화 시킬 수 있는 기반 또한 구축되었다. 이에 따라 끊임없이 회계 부정 의혹을 거론하고, 시장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여론을 부추겨 GSE는 2004년부터 규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2004년 초에 GSE에 대해서 최소 자본금의 30퍼센트 이상의 자본금을 확충할 것을 요구하고, 2006년부터는 자산 수준을 동결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예를 들어 프레디맥(Freddie Mac) 경우 매 분기 자산이 0.5퍼센트 이상 증가시킬 수 없도록 규제되었다.

더군다나, 2004년부터 SEC는 투자은행이 자체적으로 자본을 계산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통합감독프로그램'(consolidated supervised entities program)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순자본의 15배에 해당하는 부채만을 허용한 이른바 15:1 레버리지 규칙을 적용했지만, 새로운 제도 하에서 40:1까지 레버리지 비율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4)]
이처럼 금융 감독과 규제가 시장 편향적으로 변함에 따라 월가는 시장점유율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금융공학을 통해서 파생상품을 쏟아내었다. 결국 닷컴버블 붕괴 이후 금리를 1퍼센트까지 내리던 2001~2003 시기 리파이낸싱 대출이 주로 증가하였다면, 2004년부터 금리가 상승하던 시기에는 금융기업의 '혁신'을 통해 부동산 파생상품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금리가 상승한 금융환경의 변화에도 부동산시장의 버블은 유지되고 확대될 수 있었다.

4. 금융위기의 교훈과 과제

1970년대부터 부동산 자산에 도입된 증권화 기법은 현재 거의 모든 경제활동에 도입되고 있다. 80년대 중반 설비리스의 증권화를 시작으로, 자동차대출, 신용카드, 학자금대출 등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 탄소배출권, 인프라 대출 등 현금흐름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담보에 대해서 증권화 기법이 도입되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생명보험을 증권화 시키는 기법을 고안중이라 한다.[5)] 주택담보대출의 증권화시장이 9,410억 달러(2007)에서 최근 1,690억 달러까지 축소되어,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 월가는 또 다시 현란한 금융 '혁신'을 도입하고 있다. 생명보험시장이 26조 달러에 달한다고 하니 월가가 군침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기업의 파산에 베팅을 할 수 있는 CDS를 도입하여 금융공황의 주범으로 몰린 것이 엊그제인데, 인간의 생명에 베팅을 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더군다나, 기업과 달리 사람이 빨리 죽는 것은 주가나 다른 경제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위험을 회피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증폭시키지 않는 최적의 상품이라 극찬까지 하고 있다. 월가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음을 생생히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다.

우리는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 자신의 이기적 행위가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인간은 헤아릴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이기적 행위를 탐욕과 비합리성의 결과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오히려 모든 시장의 참여자는 '합리적으로' 행동하였다. 금융빅뱅에 따른 경쟁의 격화, 자기자본수익률 목표를 맞추기 위한 금융기관의 인센티브, 천문학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개인의 단기 인센티브에 따라,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였다.

---

4) OECD(2008), 같은 글.
5) 뉴욕타임스(2009/9/6), Wall Street Pursues Profit in Bundles of Life Insurance.

그러나 불행히도 개별 금융기관의 축적에 대한 배타적 동기는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피드백 효과를 통해 금융의 취약성과 시스템 리스크를 증폭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적, 간접적 효과는 너무도 복잡하여 개인의 의사결정에 포함되어 계산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대마불사'의 논리로 이러한 효과를 제거하려고 노력하였다. 위험은 체계적으로 증폭되는 기제를 구축하고 있다.

금융부문의 관리와 조정을 경쟁과 이윤동기에 전적으로 내맡기면 필연적으로 단기주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모든 수단의 동원, 사회적 이익을 침해하는 이익의 사유화 경향이 발생한다. 그리고 시장기제는 내재적으로 "안정성이 불안정성을 초래"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금융위기의 가장 큰 교훈은 금융시장은 주의 깊게 감독하고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이익(시스템 안정성)은 사적 금융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이익보다 항상 우선해야 한다. 따라서 규제를 설계할 때 개인의 단기 이익을 침해하더라도 체제의 이익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이익은 건전하고 안전한 금융체제가 구축되지 않고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금융혁신'은 다른 경제적 혁신보다 더욱 주의 깊게 감독되어야 한다. 시장주의자들은 규제가 혁신을 질식시키는 장애물이라 간주하는데 이는 편향적으로 지식을 섭취한 결과다.

예를 들어 식약청이 새로운 상품과 운영기법이 도입될 때 사전에 감독한다고 해서 시장의 경쟁이 위축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식약청은 감독과 승인 과정을 통해 신상품 개발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도록 인증을 부여하며, 임상실험을 통해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간 또한 제공한다. 이러한 감독기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단기 이윤과 시장점유율을 추구하는 기제에 따라, 우리의 건강에 해롭지만 이윤이 쏟아지는 식품과 의약품이 쏟아질 것은 자명한 이치다.

동일한 원리가 금융상품에도 적용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 특히 금융시장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짐에도 불구하고 규제는 갈수록 완화되고 있다. 새로운 금융상품이 안전한지도 모른 채, 잠재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지도 모른 채, 대량실업, 경제위기가 발생할 미래의 어느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파생금융상품의 감독은 '어렵다'는 푸념만 내던질 것이 아니라, 파생상품은 사전에

반드시 감독되고 안전 테스트를 거쳐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금융위기는 80년대 이후 진행된 장기적인 규제완화와 시장메커니즘에 내재적인 파괴적인 금융혁신의 결과임을 똑똑히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부분적으로는 시장기제와 이윤 동기는 항상 사회적으로 최적 결과를 양산하고 정부는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신념'의 결과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위기의 원인으로 서브프라임 대출, 투기, 탐욕 등을 지적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요인에 불과하다.

특히 작년부터 뉴타운 공약을 통해 거대집권여당이 탄생함에 따라 '욕망의 정치'를 거론하며 대중의 탐욕에 비판을 집중함에도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현상을 설명하는데서 인간의 탐욕적 본성도 하나의 설명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탐욕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인센티브와 추동력에 집중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 기제는 아무리 훌륭한 도덕성과 양심을 지니고 있는 인간도 탐욕적으로 행동하도록 강제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탐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불안한 노후, 고용, 소득이 주어진 조건에서 투기에 편승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지고 이는 사회적 규범으로 작용하였다.

게다가 인간은 모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나 또한 문제없다고 '위안'을 삼는 경향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는 도덕성이나 '나쁜' 행위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시스템 실패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시스템 자체가 불법이건 합법이건 위험한 금융 행위를 장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개별적 기준으로 금융기업의 '나쁜' 행위를 감독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따라서 모든 개인과 금융기업은 사회가 강제하는 행위의 규범에 따라 합리적이고 현명하게 행동했지만, 시스템 불안정성을 점점 증폭시켰다고 말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새로운 경제적 패러다임, 개인의 금융축적 동기를 추구함에 있어서 준거로서 활용할 사회적 규범에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 경제 주체가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규제와 감독을 재설계하는 작업도 필수적이지만, 고용과 사회보장 등 사회경제적 안정을 구축하는 개혁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한국노동시장 2차 구조변동의 4대 징후

2009.9.16 | 김병권_새사연 부원장 | bkkim21kr@saesayon.org

목 차

1. 8월 고용동향 특징과 고용시장 구조 변동 가능성
2. 미국식 금융시스템, 복지시스템, 그리고 고용시스템의 파산
3. 상시 구조조정으로 유지된 상용직, 대기업의 고용흡수력은 없었다.
4. 취약계층에 집중된 고용타격, 완충지대가 없다.
5. 경기회복의 주력 제조업, 고용회복의 주력은 아니었다.
6. '실질적 고실업 국가'로 변화하는가.
7. '고실업 상시화'의 징후가 고용보험에 줄 충격.
8. 실질적 고실업 국가 전환 막기 위해 '노동 유연화'의 폐기가 절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http://saesayon.org

[요 약]

- 지난 9월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25만 명 규모의 희망근로를 실시하여 고용추락을 임시로 억제하기 시작한 6월 이후 추세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이는 추석을 앞둔 3분기까지인 9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 경제위기는 과거 10~20년 동안 3~4퍼센트라는 낮은 실업률을 보이면서도 높은 생산성을 유지해왔던 미국을 가장 심각한 실업난으로 몰아넣게 된다. 그 동안 세계적으로 고용 유연화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왔던 근거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미국식 금융시스템에 이은 미국식 고용시스템, 즉 신자유주의 노동 유연화도 사실상 파산했다.

- 최근 고용동향 특징1: 상용직 증가세 유지 - "앞으로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정규직을 크게 늘리기 보다는 최소 필요인원으로 제한하고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은 비정규직 채용과 방출을 통해 할 것"이라는 점이고, "제조업과 건설 대기업들은 실적 호전 여부와 무관하게 정규직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을 것"이라는 점이다.

- 최근 고용동향 특징2: 취약계층 고용악화 집중 - 지금은 상용직 고용이 낮은 증가추세로 현상유지를 하는 동안, 고용시장에서 떨어져 나간 임시 일용직과 특히 자영업은, 향후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된다 하더라도 다시 자기자리로 되돌아오지 못한 채 상당기간 아예 고용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최근 고용동향의 특징3: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의 고용흡수력 약화 - 2009년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구조 변동 가능성의 세 번째 특징은, 기존에 고용책임을 주로 담당했던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의 주력 산업분야에서 고용 흡수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앞으로 더욱 약화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 최근 고용동향의 특징4: 실질적 고실업 국가 전환 가능성 - 이번 경제위기의 조기 회복 여부와 무관하게 향후 노동시장은 외환위기로 만들어진 '상시적 고용불안' 체제가 다시 구조변동을 겪으며 이제는 '실질적 고실업' 체제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할 것이다.

- 현재 시점에서 전망을 해 볼 때 앞으로는 ▶ 국가가 고용 추락을 임기응변식으로 막고 있지만 희망근로도 올해 25만 명 규모에서 10만 수준으로 줄이기 시작하는 내년 초부터 빠르게 효력을 상실할 것이다. ▶ 자영업의 축소 구조조정 추세는 경기회복과 무관하게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 경기회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의 고용 창출능력은 수익창출 실적에 비해서 미미한 수준을 탈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 건설업의 고용 창출능력은 앞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 ▶ 녹색 산업 등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신산업은 당분간 고용창출 효과가 빠르게 나올 분야가 아니다.

- 고용보험적립금 고갈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는 국민의 고용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일반재정'을 고용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사실상의 '전 국민고용보험제도'를 시작할 필요가 절실하다 할 것이다.

- 금융규제 강화에 버금하는 '고용보호강화'로 고용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바꾸는 것을 전제로, ▶ 사실상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보험적용 확대, ▶ 전통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을 뛰어넘는 공적 사회서비스산업으로의 산업 전환을 통한 '고용 확대형 산업구조 개편', ▶ 고용 영향평가제도 실시를 통한 사업별 고용창출 효과 검증, ▶ 비정규직 사유제한 강화나 정규직 전환시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적극적인 고용보호제도 도입 등의 다방면적 종합 대책을 서두를 때이다.

1. 8월 고용동향 특징과 고용시장 구조 변동 가능성

경기조기 회복의 낙관론이 대세를 이뤄가는 가운데, 경기회복의 핵심 지표라고 할 지난달(8월) 고용지표가 16일 발표되었다. 그 결과를 우선 간단히 압축해보자.

1) **통계청에서 9월 16일 발표한 고용동향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25만 명 규모의 희망근로를 실시하여 고용추락을 임시로 억제하기 시작한 6월 이후 추세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이는 추석을 앞둔 3분기까지인 9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새사연, <고용 없는 경기회복이 과연 가능한가?>, 2009.8.13).

취업자 수 증가 기준으로 6월 +4,000명, 7월 -7만 6,000명, 그리고 8월 +3,000명으로 일정한 구간을 횡보하고 있다. 다만 7월에 비해 취업자 수가 약 8만 명이 늘어난 것은 주로 60대 이상 여성, 그리고 임시직에서 일정한 기여를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상용직이 30만 명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고용충격이 덜하고, 임시직이 희망근로 효과로 일시적 반등을 한 데 비해 일용직, 자영업, 여성, 30대를 포괄하는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된 취업자 감소 추세 역시 지속되고 있다. 일용직의 감소폭이 다소 완화된 대신에 이번에는 자영업 감소폭이 확대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여성이 일자리 상실을 주도하는 현상도 마찬가지여서 2009년 8월 기준으로 남성 취업자가 7천명 증가한데 비해 여성은 마이너스 4천명으로 감소했다.

3) 산업별로도 제조업, 건설업 등 주요 분야의 취업자 감소폭이 약간 줄었지만 각각 10만 명 이상의 감소세를 계속 이어오고 있고 도소매업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개입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 일자리가 다시 사상 최대 증가폭인 32만 1,000명 수준으로 상승함으로써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의 감소를 보충해주고 있는 점도 동일하다.

4) 8월 공식 실업자는 90만 5,000명으로 전 달에 비해 2만 3,000명이 줄어들었지만 취업준비자 + 쉬었음 + 18시간미만 취업자 중 추가취업 희망자를 합친 실질 실업자는 오히려 5만 명가량이 더 늘어나 313만 9,000명이 되었다. '쉬었음'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8월 고용동향을 비추어 보건데, 일정한 수준의 외형적 경기회복 추세가 완연해지고 출구전략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마당에, 정부개입으로 얼마든지 변동 폭이 커지고 있는 매월의 고용지표에 너무 매달리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놓칠 수 있다. 지금 고용상황과 관련하여 진정 필요한 것은, 경기회복이냐 다시 침체로 빠질 것이냐에

관계없이 고용지형 자체의 구조변동이 시작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왜냐하면 고용 지표를 포함해서 현재의 경제위기 국면이 몇 가지 성장지표가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마치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경제위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위기를 체험한 금융, 기업, 가계, 국가 등 각 경제주체들의 행위 방식이 달라지면서 경제지형이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경제의 초점은 수출보다는 내수에, 과소비보다는 적정소비에, 시장자율보다는 정부규제에, 감세보다는 세수확보에, 소비보다는 저축에, 미국, 유럽보다는 아시아에 맞춰지고 있다”는 진단은 이를 반영한 적절한 지적이다(매일경제 2009.9.13). 물론 경제지형의 변화가 현재로서는 다수 노동자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 아니라, 사지에서 생존한 금융자본과 거대 기업들의 부활에 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 기대와는 다를 것이다.

한국의 고용시장도 2009년 위기를 거치면서 구조 변동의 징후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평생직장’으로 고용은 보장되었지만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던 외환위기 이전의 고용 체제가 외환위기로 순식간에 급변했던 것을 이미 우리 국민은 경험한 바가 있다. 고용 유연화의 확산으로 ‘있을 때 벌어두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하는 ’상시적 고용불안과 차별적 비정규직‘이 구조화된 환경에서 지금까지 10여 년간의 고용 체제를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의 글로벌 경제위기는 또 다시 외환위기 이후의 고용 체제를 뒤흔들면서 새로운 고용시장 지형으로 이동하려는 것이다. 외환위기에 이은 ‘2차 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가능성은 정말 있는 것인가.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가. 8월 고용지표까지를 추적하면서 그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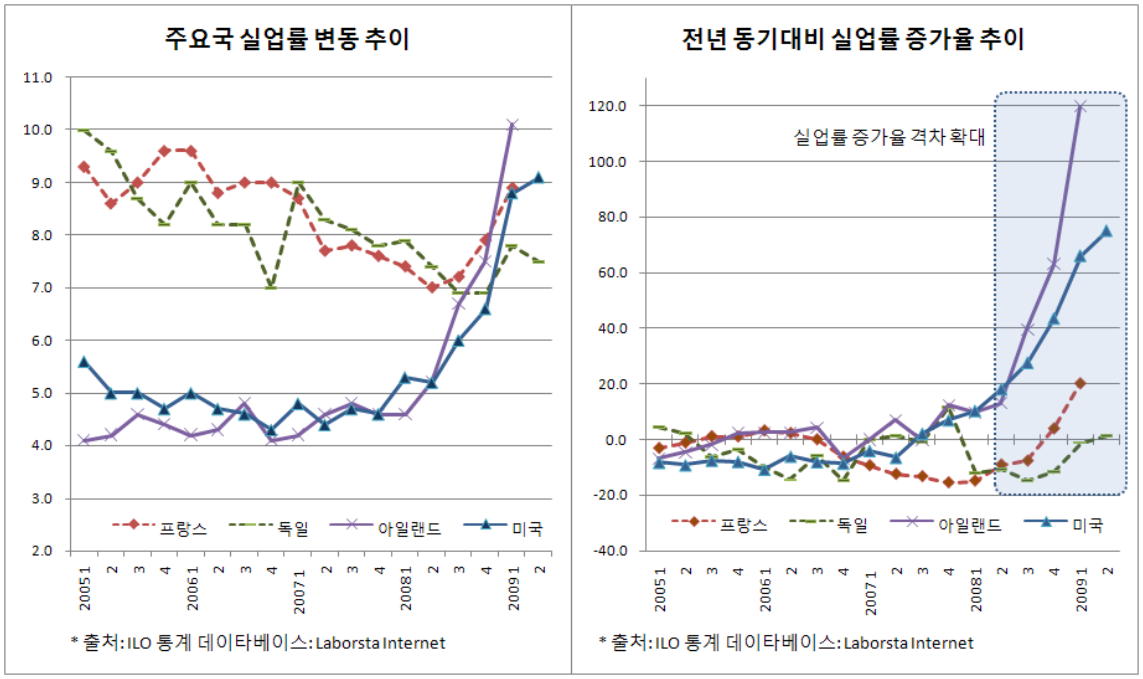
2. 미국식 금융시스템, 복지시스템 그리고 고용시스템의 파산

최근 경기회복을 빌미로 금융규제 추진에 저항하려는 월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지만, 전 세계 경제를 삽시간에 혼란으로 밀어 넣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미국식 금융시스템의 실질적 파산이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더욱 비대한 규모로 부활하고 있는 월가 생존자들의 기대와는 무관하게 그들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오바마 정부의 존립 기반을 뒤흔들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 개혁’에 대한 기득권의 저항과 미국 내부의 갈등 양상을 보건데, 무너진 것은 미국식 금융시스템만이 아니었다. 미국식 복지 시스템도 마찬가지였다. 미국 GDP 대비 의료비 지출

이 16.6퍼센트에 이를 정도로 기업 비용지출과 가계 소비지출에 더는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주고 있는 현재의 미국식 보건 시스템을 공적으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미국의 장래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이 건강보험 개혁의 절박성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미국식 금융시스템과 미국식 복지 시스템 못지않게 '미국식 고용시스템' 역시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로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이끌었던 미국식 고용시스템이 '고용 유연화'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을 포함하여 신유주의를 도입한 많은 국가들은 양호한 고용실적을 올려왔던 살아있는 모범-미국 고용모델을 추종하여 고용 유연화 정책을 속속 수용했었다.



그런데 **이번 경제위기는 과거 10~20년 동안 3~4퍼센트라는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면서도 높은 생산성을 유지해왔던 미국을 가장 심각한 실업난으로 몰아넣게 된다. 그 동안 세계적으로 고용 유연화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왔던 근거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위기로 미국 고용시장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는가는 고용 유연화가 미진했던(?) 유럽과 비교하면 명확히 드러난다. 2009년 7월 기준 미국 실업률 9.4퍼센트는 유럽연합의 9.5와 거의 같아졌다. 그러나 과거에 상대적으로 유럽이 높은 실업상태를 유지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경제위기로 미국 실업의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팔랐다는 것을 말해준다.(그림 참조)

특히 한국처럼 개방화 정도가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화로 고실업을 해결하면서 고성장까지도 달성했다며 한국 정책결정자들의 부러움을 샀던 아일랜드는 금융위기 충격여파로 다시 10퍼센트가 넘는 과거의 고실업 상태로 복귀하는 비극을 겪고 있는 중이다.

미국은 2007년 12월 공식 실업률이 5퍼센트로 올라선 이래 2009년 8월 현재 9.7퍼센트를 넘어서 조만간 10퍼센트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데 2년 안에 두 배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구직 포기자와 추가 근로를 원하는 시간제 노동자를 포함한 실질 실업은 약 2,600만 명으로 16.8퍼센트에 이른다(여경훈,<2004년 신바젤협약, 금융위기 초래한 숨겨진 배경>, 2009.9.16).

더욱이 유럽과 아시아는 올해 말까지 고용이 개선될 전망이지만 미국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조사결과도 있다. 취업컨설팅과 아웃소싱 전문업체인 미국의 맨파워가 전 세계의 고용주 1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9월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4.4분기에 미국의 고용전망지수는 -3을 기록, 전분기보다 1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는 지난해 4분기의 9에 비해서 12포인트나 내려간 것”이라는 지적이다(연합뉴스 2009.9.9).

이번 금융위기에 미국식 고용시스템이 가장 취약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며 미국식 고용 유연화 모델이 미국식 금융혁신 모델과 함께 사실상 파산한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최근 정부의 재정투입으로 겨우 지탱되고 있는 한국 고용시장 상황도 바로 외환위기 이후 미국의 고용 모델을 직수입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미국식 고용 체제의 파산으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대통령을 포함해서 “노동유연성 문제는 금년 연말까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 과제”라는 식의 과거 정책기조를 고집하고 있는 형편이다.

구조개혁 가속화라는 명제아래 “근로조건을 환경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제 및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등 고용안정성 제고와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힌 최근 정부 보고서에서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기획재정부, <거시경제안정보고서>, 200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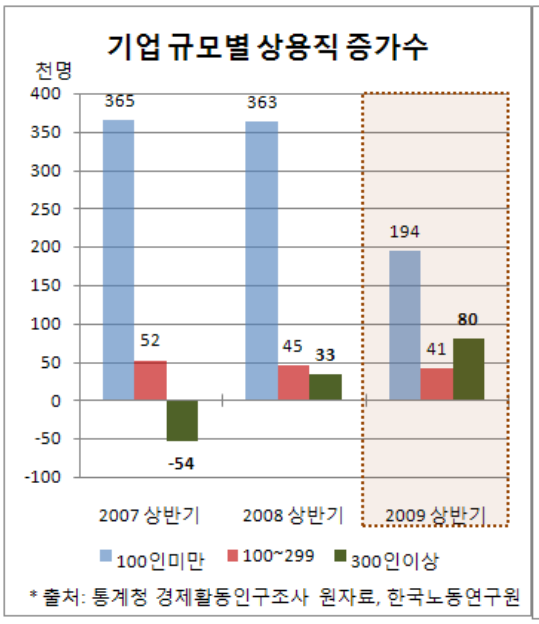
그렇다면 이미 파산한 미국식 고용모델, 신자유주의적 고용 유연화를 앞으로 지속시킬 때, 어떤 상황으로 고용구조 변동이 예상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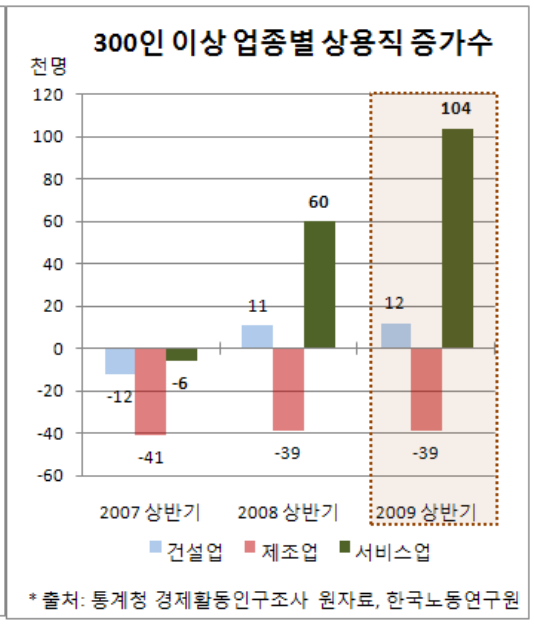
3. 상시 구조조정으로 유지된 상용직, 대기업의 고용흡수력은 없었다

2009년 고용위기가 1998년 외환위기 당시의 고용위기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면 ‘상용직의 극적인 고용추락이 없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당시 은행과 대기업에서 대량 정리해고로 몰려나오면서 상당기간 80만 명 수준의 상용직 실업자들이 양산되었던 것을 비교한다면, 2009년의 고용대란위험 시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난해에 비해 30만 명 이상의 상용직 노동자 증가세를 유지한 한국의 노동시

장은 상당히 주목을 받을 만하다.

물론 연초부터 고용 유지를 위해서라며 정부와 재계가 발 빠르게 일자리 나누기나 임금삭감을 시행하고, 정부가 지난해의 10배~20배가 넘는 매월 수백억 원의 고용 유지지원금을 투입한 효과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상용직 위주 고용으로 경영을 해왔던 기업들이, 갑작스럽게 닥친 외환위기 때문에 상용직 고용을 대거 방출했던 반면, 외환위기 이후 이른바 '상시적 구조조정'을 통해 이미 최소한의 정규직 유지와 다수의 비정규직을 활용한 시스템으로 구조변화가 된 결과가 이번에 상용직 유지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상시 구조조정 결과 경제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생산규모 자체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정규직 인력감축 보다는 임시직과 일용직을 해고하는 방식으로 초기 경제위기 대처를 해 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부터 충격이 시작된 외환위기와 달리, 이번 경제위기 충격은 자영업 → 중소기업 → 대기업으로 상향 전파된 결과, 1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상용직 증가가 현저히 둔화되었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은 비록 2009년 상반기 상용직 증가수가 8만 명으로 적은 수이지만 전년 대비 오히려 증가세가 더 확대되었다.(그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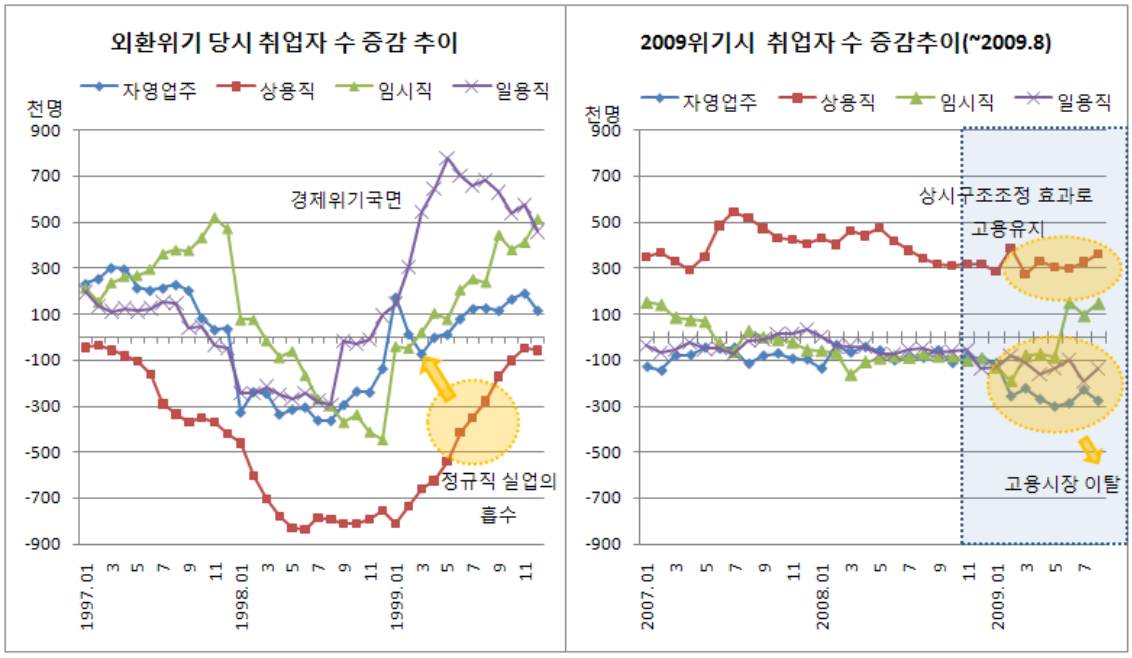
물론 이 정도 증가세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깜짝 실적행진을 거듭한 것을 고려할 때 기대했던 만큼의 정규직 신규채용을 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깜짝 실적 행진을 주도한 제조업에서는 오히려 상용직 고용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4만 명으로 감소했던 점에 주목해야 하고, 건설업은 정부의 막대한 건설투

자에 비해 상용직 채용은 그야말로 미미한 수준이었다.(그림 참조)

여기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정규직을 크게 늘리기 보다는 최소 필요인원으로 제한하고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은 비정규직 채용과 방출을 통해 할 것"이라는 점이고, "제조업과 건설 대기업들은 실적 호전 여부와 무관하게 정규직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을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구조에서 제도적 개혁이 없다면 앞으로 더욱 축소된 규모로 상용직이 비탄력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대기업 실적행진과 무관하게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4. 취약계층에 집중된 고용타격, 완충지대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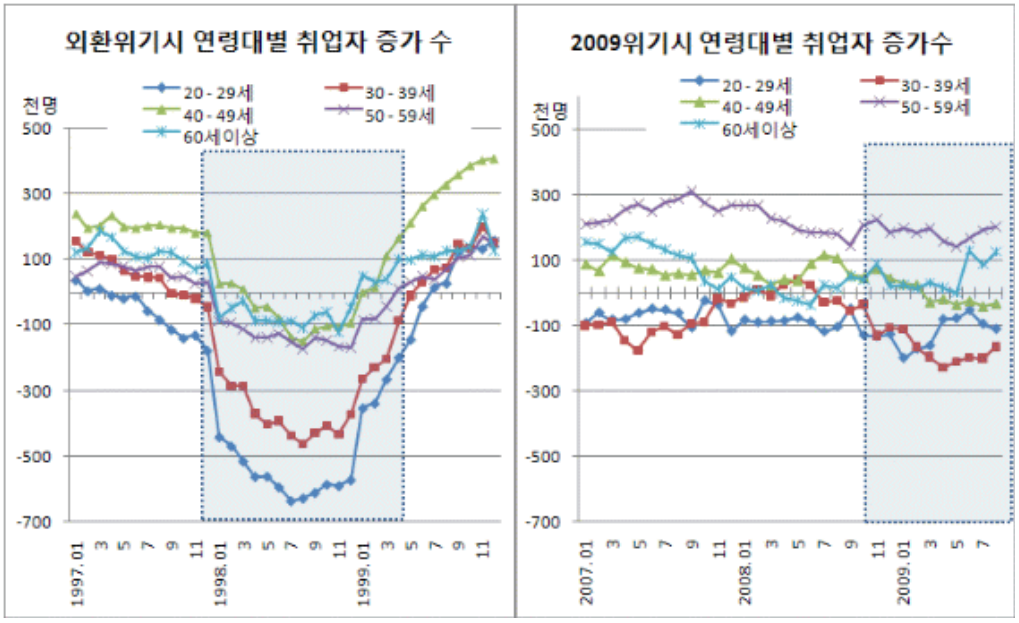
이번 고용위기의 두 번째 특징은, (대량 해고로 몸살을 앓은 쌍용차 사례의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기업 상용직과 같은 안정적인 일자리는 비교적 타격이 덜 한 반면, 대신에 고용 취약계층은 거의 외환위기에 버금할 정도의 타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기업에서 안정되게 일하는 직장인들이 잠시 불안감을 갖다가 곧 잊어버린 것과 달리, 임시 일용직과 청년, 여성과 자영업인들은 또 다시 생계걱정에 날을 지새워야 했다는 뜻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비록 임시직은 희망 근로 등으로 6월 이후 플러스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일용직과 자영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초입 단계인 2007년 말부터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해서 2009년에는 각각 최소 마이너스 10만 명 이상의 감소세를 보이면서 충격을 받게 된다.

취약계층에게 집중된 고용충격은 외환위기 당시와 전혀 다른 고용구조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이는 앞으로의 고용위기 해소 방향에도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즉, 외환위기시에는 정규직의 급격한 일자리 감소를 임시 일용직이나 자영업이 흡수해 주면서 일종의 '고용 완충지대' 역할을 하여 고용 회복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용직 고용이 축소된 형태로 현상유지를 하는 동안, 고용시장에서 떨어져 나간 임시 일용직과 특히 자영업은, 향후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된다 하더라도 다시 자기자리로 되돌아오지 못한 채 상당기간 아예 고용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들을 고용시장에서 받아줄 완충지대가 실업대열 말고는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임시 일용직과 자영업이라는 측면 외에 또 다른 각도로 고용 취약계층에게 집중된 충격을 발견할 수도 있다. 취업자 감소의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 고용감소가 두드러지다는 점이고,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해야 할 청년들의 취업감소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특히,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하여 연령대별 취업자 증감에서 몇 가지 눈에 띄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20대는 예나 지금이나 고용위기에 가장 취약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번에는 정부의 청년 인턴 지원 등의 효과로 20대 고용이 일시적으로 호전되었지만 이는 연말까지 한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는, 감소폭으로 보면 30대의 일자리 감소가 가장 크다는 점이다. 정확한 측정은 어렵지만 이는 대략 평균 취업 연령이 남성 기준 29세까지 높아지면서 최초 취업이 늦어진 30대 청년들의 고용악화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최근 몇 년간 취업한 청년들의 일자리가 정규직 보다는 임시 일용직일 가능성이 높았음

을 암시할 수 있다. 실제로 30대 실직자 가운데 여성들이 많았던 사실은 이들이 주로 임시 일용직으로 취업했을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셋째는, 외환위기 당시 가장 타격을 덜 받았고 회복도 빨랐던 40대가 50대 이상 보다도 취업자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와 달리 40대 역시 이미 임시 일용직이나 자영업 등에 상당수 포진해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과, 제조업과 건설업 부문에 종사하는 40대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면서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반면 50대와 60대 이상은 정부의 희망근로 채용 등으로 인해 다시 고용 증가세로 돌아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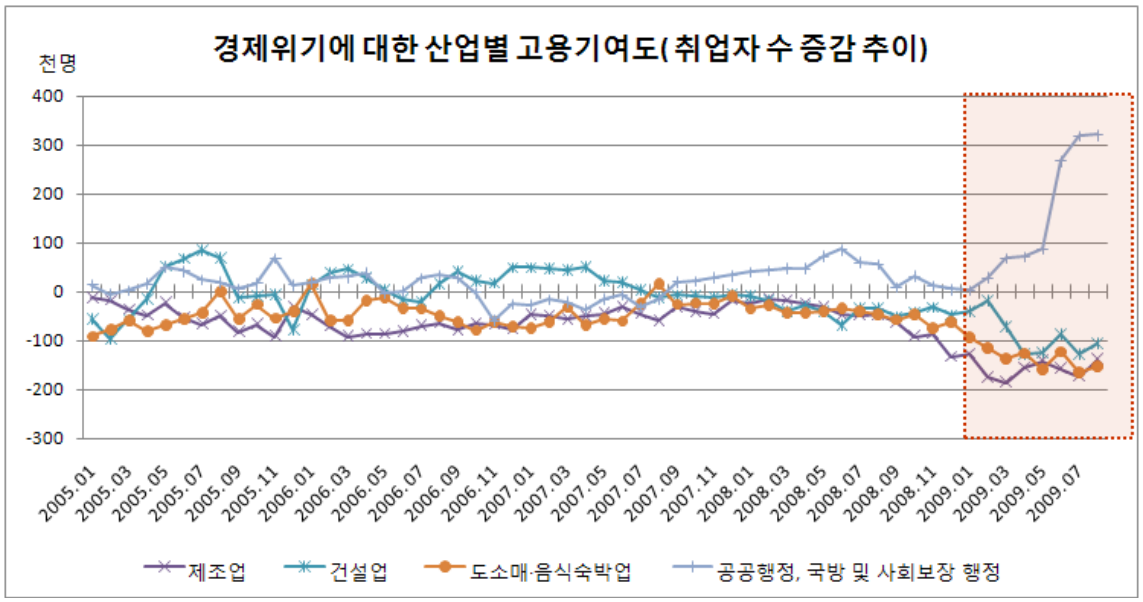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면, **최근 고용시장 구조 변화로 인해 청년 고용불안 여파가 20대를 넘어 30대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 주로 한 가정의 가장일 가능성이 높은 30대와 40대에도 광범위하게 임시 일용직이 분포되어 있어 현재의 고용구조가 우리 가정 가계 운용의 안정성을 크게 흔들 고 있다는 점**이 외환위기 당시와 구조적으로 달라진 고용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5. 경기회복의 주력 제조업, 고용회복의 주력은 아니었다

2009년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구조 변동 가능성의 세 번째 특징은, 기존에 고용책임을 주로 담당했던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의 고용 주력 산업분야에서 고용흡수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앞으로 더욱 약화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 된 노동자들을 흡수하며 한때 초과잉상태로까지 팽창했던 도소매업 중심의 서비스 자영업은,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자체 구조조정을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고용이 축소되어왔고 이번 금융위기 이후에는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이며 줄어들고 있다.

또한 그 동안 고용 확대에 일정한 기여를 해왔던 한국의 전통적 고용창출 선도 분야인 건설업도 이명박 정부의 기대와 달리 엄청난 정부예산을 쏟아 부으며 일자리 창출을 전망했으나 역시 마이너스 10만 명 이상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더구나 최근 반도체, LCD, 휴대폰, 자동차 등 핵심 제조업들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경기 조기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주가를 올려가고 있지만 제조업에서의 고용 감소폭은 대기업에서조차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모든 산업분야에서 떨어져 나온 실업자 규모만큼을 현재는 정부의 재정을 투입해 2009년 1월에 비해 100배 이상 취업자 증가수가 늘어난 공공분야 고용으로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림 참조)



그 결과, 최소 400만 명 이상의 고용을 꾸준히 유지했던 제조업이 2007년에 400만 명 밑으로 주저앉았고 2009년 8월에는 370만 명으로 떨어졌다. 단일 산업으로만 180만 명이라는 엄청난 고용을 지탱했던 건설업도 올해에 160만 명 수준으로 취업자 수가 추락했다. 과거에 그나마 서비스업종으로 몰렸던 구직 인력들도 지금은 영세한 도소매업의 과잉팽창을 이기지 못하고 가혹한 자체 구조조정에 더해, 대형 유통자본 골목상권 잠식에 설자리를 잃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기 여파로 금융분야에서는 전혀 일자리가 늘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고 구체적 내용도 없는 '녹색산업'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아직 요원하기만 하다.

고용창출을 중심으로 이 모든 사실을 본다면, 이제 한국의 산업이 전통적인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고용을 이끌고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신 서비스 산업, 그것도 이미 과잉된 도소매업이 아니라 '공적인 사회서비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고용창출과 사회안전망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면서 산업 구조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6. '실질적 고실업 국가'로 변화하는가

지금까지의 고용구조 변화를 요약하면, 상용직과 같은 안정적인 일자리는 고용 축소도 적은대신 고용 확대도 미미할 것이고, 고용 취약계층은 거의 외환위기에 버금갈 정도의 고용 감소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때 '이태백', '삼팔선', '사오정', '오륙도'라는 말이 유행어가 된 적이 있지만 지금이야 말로 20대에서 50대까지 모든 취업 연령대에서 고용불안을 넘어 노동시장 이탈의 가능성마저 상존하고 있다. 아울러 전통적 고용책임분야였던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은 대기업의 글로벌 선방

이나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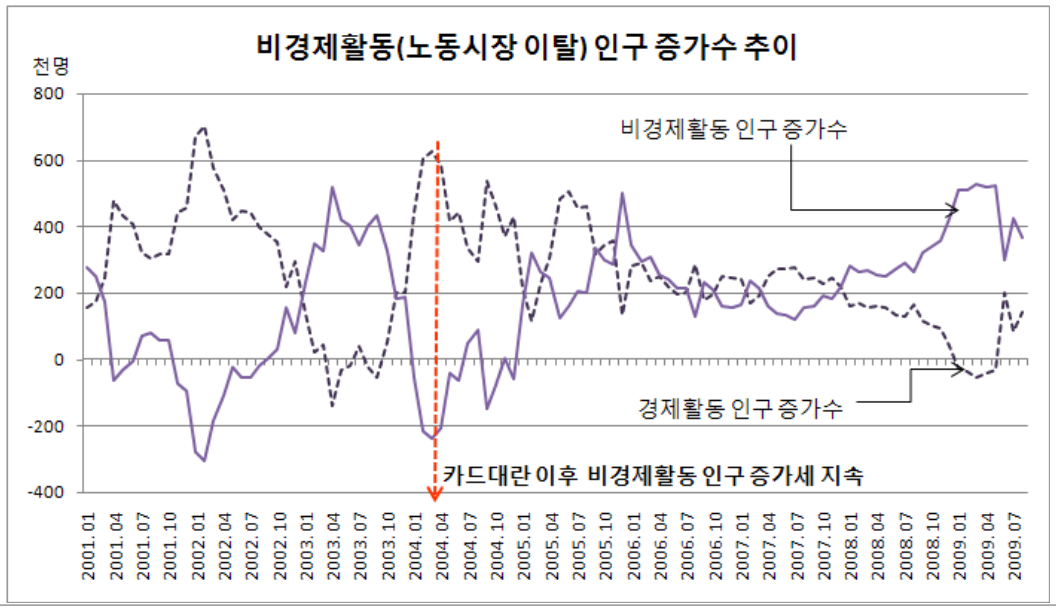
그렇다면 이런 구조가 향후에 경기회복과 함께 어떻게 변할 것인가. 현재 시점에서 전망을 해 볼 때 앞으로는 ▶ 국가가 고용 추락을 임기응변식으로 막고 있지만 희망근로도 올해 25만 명 규모에서 10만 명 수준으로 줄이기 시작하는 내년 초부터 빠르게 효력을 상실할 것이다. ▶ 자영업의 축소 구조조정 추세는 경기회복과 무관하게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 경기회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의 고용 창출능력은 수익창출 실적에 비해서 미미한 수준을 탈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 건설업의 고용 창출능력은 앞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 ▶ 녹색 산업 등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신산업은 당분간 고용창출 효과가 빠르게 나올 분야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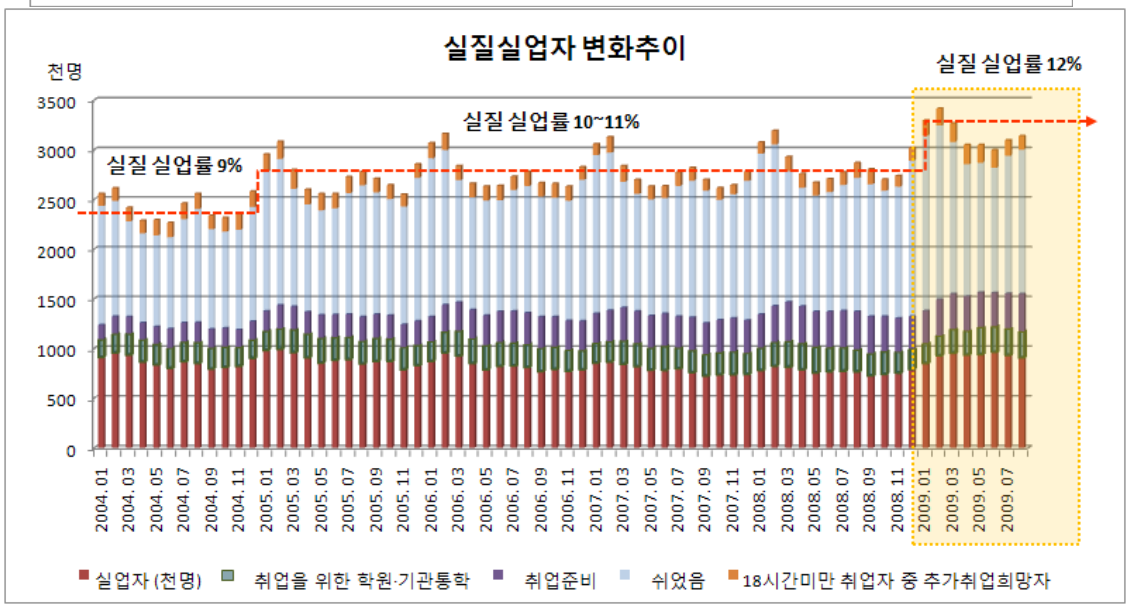
결국 지금과는 또 다른 노동시장의 구조 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할 것이다. 이른바 노동시장 이탈 구조화(비경제활동 인구 확대)나 구조적 실업 상시화 가능성이다. 이미 2004년 카드 대란에서 벗어난 이후 비경제활동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이와 반비례하여 경제활동 인구(취업자+구직자)는 증가폭이 감소해왔다. 올해 들어서 2009년 1~5월까지는 아예 전년 대비 마이너스 3만 명 수준으로 떨어진 경제활동인구 증가수는 6월에 희망근로 효과로 겨우 플러스로 돌아선다.(그림 참조)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도 “실업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적극적인 구직의욕이 감퇴하고 교육이나 훈련 부족으로 인해 재고용 가능성이 감소하게 되어 구조적 실업(structured unemployment)이 증가하거나 노동시장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노동시장 이탈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면서 적극적인 대처의지를 밝히지는 않고 있다(기획재정부, <거시경제안정보고서>, 2009.9).

결국, 이번 경제위기의 조기 회복 여부와 무관하게 향후 노동시장은 외환위기로 만들어진 ‘상시적 고용불안’ 체제가 다시 구조변동을 겪으며 이제는 ‘실질적 고실업’ 체제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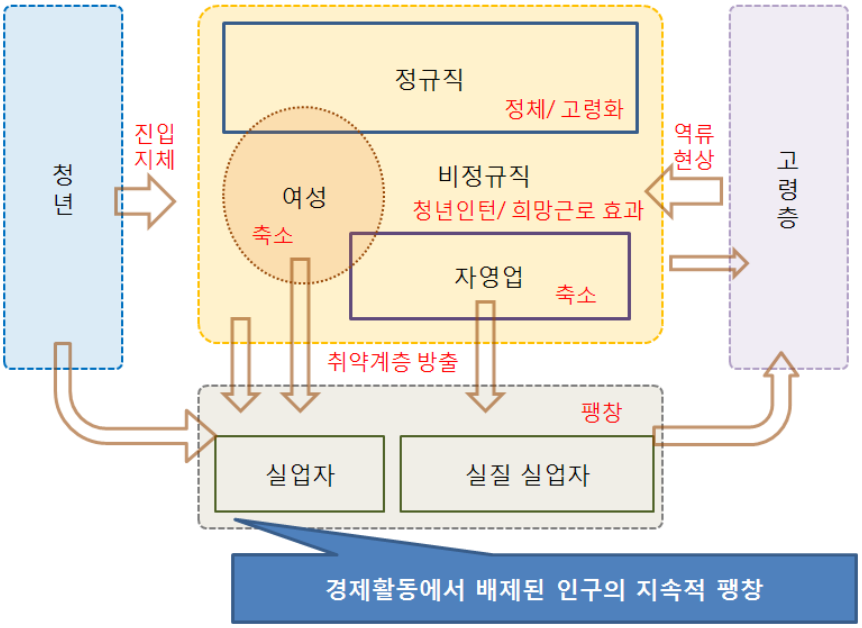
이미 2000년대 이후 공식적인 실업률이 3퍼센트 수준을 맴돌고 있는 동안, 실질 실업률은 지난 10여 년 동안 단계적으로 상승해왔다. 공식 실업자에 더해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계산되어 있는 취업 준비를 위한 통학생, 취업 준비자, 쉬었음, 18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 희망자를 모두 더한 실질 실업률은 2004년까지는 9퍼센트(230만 명대), 2005년~2008년 기간에는 10퍼센트 수준(270만 명대)이었다가 2009년 들어오면서 12퍼센트(300만 명대) 수준으로 높아진다. 공식실업자 90여만 명의 3배가 넘는 수자로 커진 것이다.(그림 참조)





문제는 앞서 말한 이유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실질 실업률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사실이다.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노동시장 변화 추세로 보건데, **앞으로 고용시장 지형은 ▶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지체가 계속되고, ▶ 정규직이 정체되고 고령화되는 가운데, ▶ 임시 일용직 등 비정규직은 정부의 청년인턴과 희망근로 시한이 만료되면 일부는 경기회복으로 흡수되겠지만 일부는 노동시장을 이탈할 것이며, ▶ 여성의 고용축소도 원상회복되기는 어렵고, ▶ 자영업 고용 축소도 당분간 계속될 것이며, ▶ 일부 고령층은 거꾸로 질 낮은 일자리로 역류하는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이탈이 지속되는 추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그림 참조)

그림: 한국 고용시장의 구조변화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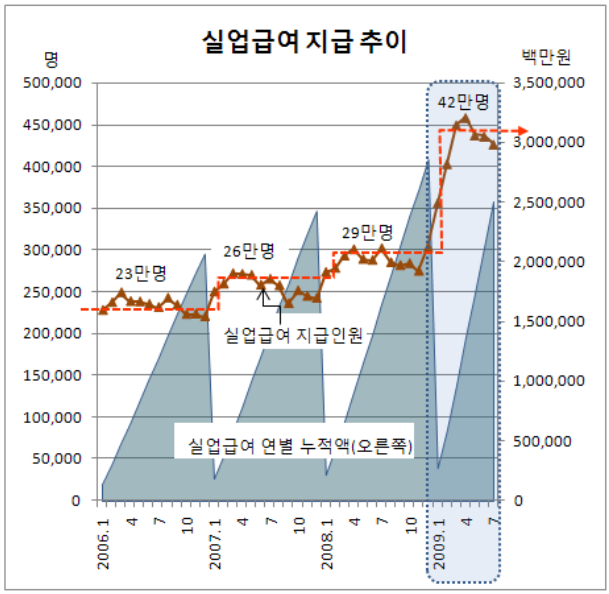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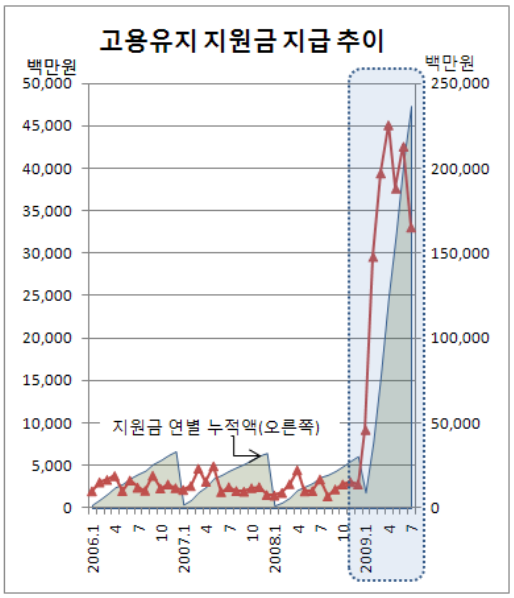
7. '고실업 상시화'의 징후가 고용보험에 줄 충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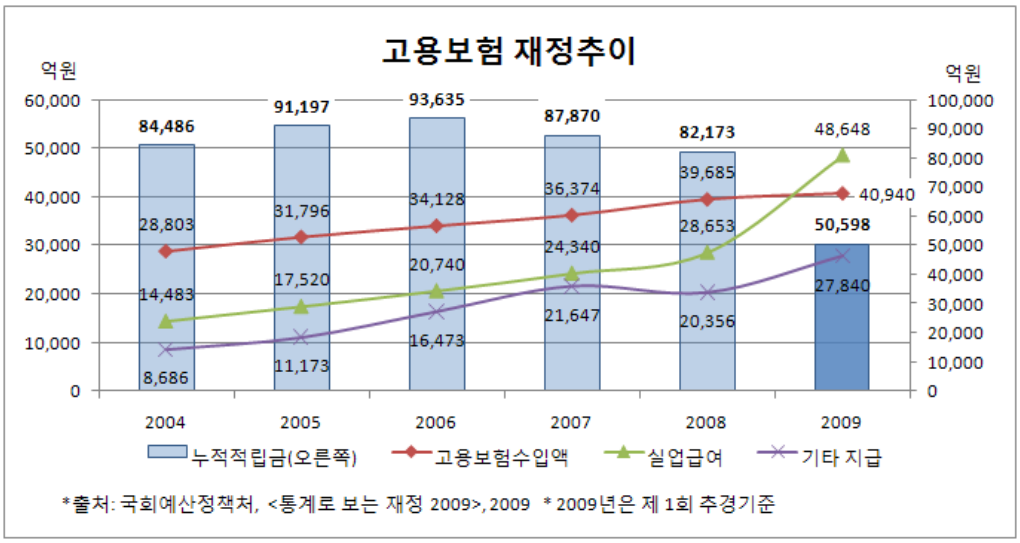
앞으로 예상되는 고실업 상시화 징후가 가장 먼저 충격을 줄 것은 고용보험 시스템이 될 것이다. 고실업 가능성에 대비한 가장 시급한 대책은 실업자에 대한 생계와 재취업 대책이고 그 다음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대책, 마지막으로는 고용을 보호할 제도적 개혁이 뒤따라 올 것이기 때문이다.

전체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가 40퍼센트도 안 될 정도로 아직 포괄범위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경제위기 이후 이미 실업급여 수급자는 매월 공식 실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40만 명 수준을 돌파했다. 2006년 23만 명 수준, 2007년에는 26만 명 수준, 2008년 29만 명 수준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09년에는 아예 50퍼센트 가까이 뛰어오른 40만 명 이상을 넘어서게 된 것이다. 2009년 4월에는 월간 실업급여 지급액이 4,000억 원을 넘어서게 되었고, 2009년 7월까지 연간 누적 지급액은 거의 지난해 전체 수준과 맞먹는 2조 5,000억 원을 돌파하게 된다. (그림 참조)

문제는 이처럼 매우 제한된 수준의 고용보험제도 아래에서도 실업급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출되는 고용유지 지원금까지 크게 증가하는데도 고용보험재정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이미 고용보험재정은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볼 때 이미 2007년부터 적자를 기록해왔다. 다만 그 이전부터 누적된 적립금의 여유가 있어 이를 보충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 결과, 2009년에 거의 5조 원에 육박하는 실업급여 지출이 예정되어 있고, 기타 고용안정지원금과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그리고 모성보호지원금도 모두 합해 3조 가까운 금액이 지출될 것을 예상한다면, 2008년 까지만 해도 8조 2,000억 원이 넘었던 고용보험 적립금은 2009년 말 기준으로는 무려 3조 2,000억 원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그림 참조)

향후에 실업급여지급의 지속으로 인한 고용보험기금 고갈의 가능성은 없는가? 오히려 국민연금 고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기금 고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정부 기대와 달리 느린 회복세가 장기화될 경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자영업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거나 지급 비중을 높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확인해야 할 문제는 지금까지 실업급여 지급이나 고용유지 지원금과 같은 자금이 정부가 아니라 노동자와 기업이 그동안 적립해온 재원으로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동부가 임의로 자금집행을 해서 정부가 생색을 내고 있을 뿐이다. 이대로라면 조만간 정부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인상 등과 유사하게 고용보험료 인상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고용은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안전망 대책이자 복지일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는 국민에 대한 고용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일반재정'을 고용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사실상의 '전 국민고용보험제도'를 시작할 필요가 절실하다.

8. 실질적 고실업 국가 전환 막기 위해 '노동 유연화'의 폐기가 절실

앞서 미국의 금융시스템과 복지시스템의 실질적인 파산에 이어 미국식 고용시스템도 사실상 파산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 유연화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던 근거가 무너진 것이다. 사실 신자유주의란 '경제의 금융화'와 '노동의 유연화'라고 하는 두 축을 기반으로 자본의 수익실현 구조를 확대해온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금융위기로 한편에서는 신자유주의 금융 수익모델이 파산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 유연화로 인한 고용불안 → 소득정체 → 차입에 의한 가수요 확대라고 하는 절대 지속될 수 없는 순환구조가 파산하기도 했다.

세계 각국이 경제위기에 대처하면서 '금융규제'에 대해서는 (월가의 반발로 최종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어느 정도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고용 안정화'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의제들이 전진적으로 쟁점화 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금융규제 강화'는 진행되고 있는데 왜 '노동보호 강화'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그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보운동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해 촉발되었다기보다는 금융시스템 자체 결함으로 안에서부터 폭발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신자유주의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이 미진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글로벌 소비위축을 해소하고 생산-소비의 순환을 복원시켜내는 길은 두 가지 뿐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지금처럼 고용 유연화를 지속시키면서 정체된 노동소득을 금융공급 확대 재개로 풀어서 소비를 늘리는 신자유주의적 '차입경제'를 복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자유주의적 고용 유연화 폐기를 전제로 고용보호, 나아가 고용 확대를 통해 소득을 안정시킴으로써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을 복원시켜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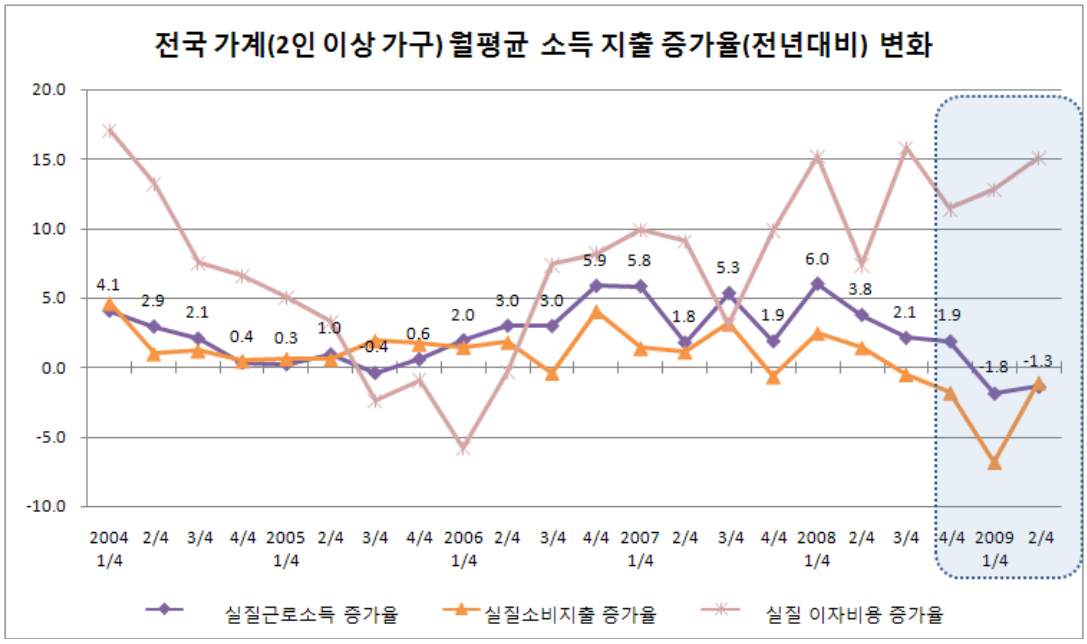
만약 우리정부가 고용 유연화를 지속시키는 길을 선택한다면 노동시장 이탈과 실업

의 확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 우리 경제의 치명적 약점인 내수기반 회복의 길도 자동적으로 포기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청년인턴제나 희망근로 같은 일회성 응급처방으로 눈앞에 닥친 2009년 고용위기를 대처하는 것이 사안의 긴급성에 비추어 불가피했다고 하더라도, **2010년부터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질 2차 고용구조변동에 대처하여 구조적인 전환해법을 찾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국내적으로 고용 유연화를 지속시키는 가운데 수출금융지원이나 환율환경 지원 등을 동원하여 글로벌 수출 대기업들의 해외 현지생산 판매와 같은 방식으로 경기회복을 꾀하려는 조짐이 강하다.**

다시 강조하건데 고용시장 지형 변화를 앞두고 있는 지금 상황은 일시적인 일자리 마련이나 수동적인 고용방어 차원을 넘어서 '고용시장의 틀'을 바꾸는 적극적인 고용제도 개혁으로 의제를 이동시킬 필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광범한 노동시장 이탈 가능성을 차단하고 반대로 청년과 여성, 임시 일용직 등이 안정된 고용시장으로 복귀하는 흐름을 새로이 형성할 수 있도록 정책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규제 강화에 버금가는 '고용보호 강화'로 고용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바꾸는 것을 전제로 ▶ 사실상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보험적용 확대 ▶ 전통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을 뛰어넘는 공적 사회서비스산업으로의 산업 전환을 통한 '고용 확대형 산업구조 개편' ▶ 고용 영향평가제도 실시를 통한 사업별 고용창출 효과 검증 ▶ 비정규직 사유제한 강화나 정규직 전환시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적극적인 고용보호제도 도입 등의 다방면적 종합 대책을 서두를 때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가계부채가 팽창하고, 그럴수록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결국은 가계부실위험성을 키우게 될 것이다.(그림 참조)